

( 세미나 안내 )

## ‘노예의 길’ 출간 80주년 기념 세미나

2024. 09.27(금). 13: 00 - 18: 30

자유기업원 열림홀 (여의도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1세션 (오후 1: 10 ~ 3: 10)

1장(버려진 길)

2장(위대한 유토피아) ..... (발표: 김행범, 토론: 김강식)

3장(개인주의와 집단주의)

4장(계획의 '불가피성')..... (발표: 신중섭, 토론: 곽은경)

2세션 (오후 3: 20 ~ 5: 20)

5장(계획과 민주주의)

6장(계획과 법의 지배)..... (발표: 권혁철, 토론: 황인학)

10장(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11장(진리의 종말).....(발표: 김이석, 토론: 이현종)

3세션 (오후 5: 30 ~ 6: 30)

15장(국제질서의 전망)..... (발표: 이강영, 토론: 신동준)

종합

석식 및 자유 토론 (오후 6: 30 ~ )

# 세미나 취지문

- 80년 간의 세계 일주 -

*Classical-Liberals never die; they just are still prodding the left, lying on the care home beds or tombs.*

철 베른의 『80일 간의 세계 일주』는 1872년 영국 런던에서 출발하여-인도-미국... 영국으로 가는 여정 이야기로 지식 발전과 산업화로 번영을 향해 가던 근대 유럽 국가의 자신감이 들어있다. 그러나, 작품 속 여행자들은 당시 고종의 섭정 노릇하던 대원군을 싫어했거나 눈길을 줄 가치도 없다 여겼는지 일본은 경유하되 한반도를 외면하고 갔다. 그러나, 1944년 9.18일, 이번에는 미국에서 출간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80년 동안 세계를 도는 여정이 따로 시작되었고 올해 마무리되었다. 이번에는 그 책이 한국도 거쳐 갔다. 저 출판기념일 즈음 한국의 가혹한 늑더위는 한국인에게 저 책 타이틀, 출판 연도, 그리고 출판일을 기념하라는 요구일지 모른다.

시대의 계명과 도약이 자유라는 아이디어로 나타났음을 하이에크 책으로 깨닫고 그 책에 노예같이 사로잡힌 일단의 사람들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연다. ‘《노예의 길》을’ 아는 것과 ‘《노예의 길》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너무 유명하기에 오히려 내용 자체는 모르는 후자의 함정을 피하고, 구어로 하이에크의 메시지를 나누자는 것이다.

고전적이란 말이 경멸이 되기도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아직도 그 구식 자유주의?’로 읽는 경우이다. 또 자유주의 앞에 따뜻한, 사회적...등의 수식어를 붙여 자유주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예도 많다. 만약 ‘고전적’이란 말이 없다면 liberalism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좌파 진보주의라는 뜻이 될 정도로 오염되었다. 따라서, 자유를 진정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와 “고전적 자유주의자(Classical Liberals)”라는 복합어가 중요한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주의,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는 의미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세간의 논쟁을 따라 뉴라이트(New-Right)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현실의 당파 정치 프로젝트일 뿐이며, 당신이 혹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랜 계보를 지닌 진정한(true) 자유주의, 원래의(original) 자유주의, 구(paleo) 자유주의... 즉,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일부를 지금이야 발견한 연소자라는 걸 말해 줄 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한국 미래에 답이 될 것인가? 『밀턴 프리드먼: 최후의 보수주의자』(2023.11)에서 저자(제니퍼 번스)가 밀턴 프리드먼에 대해 묘사한 말은 곧 고전적 자유주의 일반으로 유추할 수 있다. 좌파가 압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 사회의 대격변기 다음에 도래할 정치 질서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스스로 태어난 아테나처럼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며, 단절될 수도 없다. 모든 최첨단 아이디어는 고전적인 것의 사색에서 출발했고, 최첨단의 가치가 시간의 검증으로 확인되면 고전적인 것의 새 리스트에 추가된다. 자유 한국의 길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한국이 불운하다면, 《노예의 길》 출간 100주년이 되는 2044년에는 하이에크, 미제스, 뷰캐넌, 프리드먼 같은 위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극우파 지적 테러리스트로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운이 좋다면, 참혹한 세계대전, 공황, 그리고 거대한 사회 실험의 격동을 통해 그 선현들이 찾아낸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신을 따르고 있을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우군이 적음도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전하려는 복음이 진부해 보이되 진실의 힘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비는 그들의 목소리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일 때 더 강력한 빛을 준다는 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들은 요양원 병상이나 무덤에 누워 여전히 좌파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

2024. 09.18

**‘노예의 길’의 노예들.**

## ‘노예의 길’ 이정표

하이에크 《노예의 길》은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설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반(反)자유주의 사상인 사회주의·파시즘·나치즘·공산주의...전체주의가 문명의 토양이던 자유주의를 밀어내고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배적 사상으로 부상했는지를 알려주는 패전기이다. 여기서 보인 하이에크의 한 예지는 자유와 양립할 수 없게 된 사회주의가 민주적 사회주의로 변장하고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주지 못하는 다른 새 자유 곧 경제적 자유를 준다면서 다시 나타난 점과, 그렇게 변장한 사회주의·파시즘·나치즘이 자유주의를 공동의 적으로 삼는 한 집안 패거리임을 규명한 점이다.

전자는 1, 2장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여기서 잠깐 다룬 후, 그것에 수반한 위험을 7장과 14장에서 재론할 것이다). 후자는 파시즘·나치즘이 극우, 사회주의·공산주의가 극좌라는 고식적 생각 틀이 완전히 틀렸으며 이들 모두는 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극좌일 뿐이라는 점이다. 나중에 12장에서 하이에크는 이 중에서도 자신의 모국인 독일의 “나치즘”을 재론하면서 그 뿌리가 사회주의임을 다시 논증할 것이다. 이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각 국면별로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1장, 2장에서 자유주의의 포기가 개인주의를 상실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하이에크는 3장에서 그 개인주의 대신 들어온 집단주의를 당연히 다룬다. 4장에서는 이 집단주의의 중요한 속성인 ‘계획’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계획의 심화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민주주의와의 갈등, 법의 지배 위기 문제를 5, 6장에서 다루게 된다. 여기서는 하이에크의 정치 철학이 주로 부각된다. 그 계획이 가하는 경제 통제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7장). 이어서 계획과 사회주의 집행 과정에서 경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루며(8장), 계획주의가 제시하는 경제적 보장의 허구성(9장), 그것이 도덕 철학에 주는 함의(10장), 지식과 사유 방식에 주는 악영향(12장)을 다룬 후, 전체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실제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인(13장) 후,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14장),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이슈가 국제 질서에 주는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15장). 우리의 세미나는 이 중에서 1, 2, 3, 4, 5, 6, 10, 11, 그리고 15장을 다룰 것이다.

각 발제자가 두 개 장을 정독 후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형식적 요소를 가급적 지양하고 진행하며, 재정적 의존도 받지 않고, 주도 주체도 없는 acephalous unit 모습이지만 우리 사회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자생적 세미나이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의 깊이 있고 실제적 성찰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4. 09.27

# 목 차

세미나 안내  
세미나 취지문  
'노예의 길' 이정표

## 본문 순서

제1장. 버려진 길 (김행범)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김행범)  
제1장, 제2장에 대한 토론문 (김강식)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신중섭)  
제4장. 계획의 '불가피성' (신중섭)  
제3장, 제4장에 대한 토론문 (곽은경)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권혁철)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권혁철)  
제5장, 제6장에 대한 토론문 (황인학)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김이석)  
제11장. 진리의 종말 (김이석)  
제10장, 제11장에 대한 토론문 (이현종)

제15장. 국제 질서의 전망 (이강영)  
제15장에 대한 토론문 (신동준)

Epilogue

## 제1장. 버려진 길

발제: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 공공선택학)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Hamlet)》은 유령의 출현으로 시작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바로 햄릿을 흉내 내어 유령의 출현으로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1848)을 시작했다.<sup>1)</sup> 유물론을 세우는 공산주의 사상의 경전은 첫 문장부터 물질을 스스로 부정하고 영적 존재를 부르며 출발한 것이다. 백년쯤 후 하이에크는 이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빗대는 어투로 역시 어떤 영적 존재를 거론하며 그 유명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시작한다:

*“문명의 행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뀔 때/ 즉 우리가 기대해 온 지속적 진보 대신에 과거의 야만 시대와 관련된 악으로 우리 자신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 아닌 다른 모든 걸 탓한다./ 우리 모두는 최선의 빛을 따라 노력해 왔고, 많은 최고의 지성들이 이곳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오지 않았던가?/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망은 더 큰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번영을 지향해 왔지 않았던가?/ 만약 그 결과가 우리의 목표와 너무 다르다면, 곧 자유와 번영이 아니라 속박과 불행이 우리를 대면하고 있다면, 사악한 세력이 우리의 의도를 가로막았다는 것과, 우리는 어떤 악한 힘의 희생자이며, 우리가 더 나은 것으로 가는 길을 새로 출발하기 전에 이것들을 먼저 정복해야 함이 분명하지 않은가?/*

노예의 길의 이 시작 부분은 자유주의 문헌 중 가장 비장한 부분이며, 어떤 톤으로 번역하든, 자유가 사라진 도성을 바라보는 하이에크가 비장함을 운율을 넣어 갈파한 자유주의의 예레미아 애가(The Lamentation in Liberalism)임이 드러나야 한다. 서구 문명은 당초에 예상한 길에서 너무나 먼 곳에 와 있다. 인간이 분명 선한 의도와 사회 진보의 열정으로 몰두해 왔건만 왜 이리 되었나! 과거 우리를 진보로 이끈 자유주의 이념에 잘못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도.

하이에크는 여기에서 어떤 사악한 영적 힘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그의 ‘희생자’라고 선언하여 서구인 당신들은 무죄라는 도덕적 안도감을 우선 주었다. 피해자가 범인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러나 조금씩 지면을 넘기면서 하이에크는 나중에는 그 희생자 자신이 바로 이 사태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범인임을 일깨워 준다.

---

1) Derrida(2006), Specters of Marx: The State of the Debt, the Work of Mourning and the New International (New York: Routledge, 2006) ; Yadav(2023: 21).

사악한 자본가, 특정 국가의 사악한 정신, 앞 세대들의 우둔함, 혹은 반세기 동안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사회체제, 이 가운데 그 어느 것을 용의자로 삼든 우리는 모두 지금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최근까지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세대 동안 선의의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했으며 우리의 사회적 삶에 주요한 변화를 결정한 선구적 사상들은 결코 틀릴 수 없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 문명의 현재 위기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만 빼고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지금의 암담한 상황이 분명 남이 아닌 **우리가** 잘못된 결과일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이상을 추구했더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희생자인 줄 안 우리가 곧 범인이었다. 최고의 지성들의 도움으로, 최선의 의도로, “나쁜 길로” 열심히 달려 온 우리가 바로 가해자였다. 이 부분에서 ‘선의’는 하이에크가 보여주기 위한 키워드이다. 하이에크는 여기에서 애덤 스미스가 오래전 갈파한 시장 경제의 위대한 명제, 곧 **세상과 타인에 대한 선의 없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를 원했을 것이다.

각국이 서로 다른 이념 가치를 표방하며 지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맹렬히 싸우느라 우리는 타국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간주하기 쉬우나 실은 유럽은 19세기의 이상, 혹은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이라고 막연하게 불리던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공통점이 있다. 그러다 약 25년 전부터 이 길에서 모두 벗어나 전체주의로 가기 시작했다. 영국과 미국은 타국보다 한 걸음 뒤늦게 그 추세를 따르고 있었을 뿐.

## 하이에크는 이상주의자

하이에크의 정치 철학은 팩트, 경험보다 사상, 이념의 우위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상주의적인 것이다. 현실을 초월한 어떤 사상(이상, 철학, 관념, 의지...)가 현실을 바꾸는 것이지 현실의 힘이 우리의 사상을 그에 맞춰 바꾸도록 강요한 게 아니라고 일관한다. 사상, 주관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당신네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sup>2)</sup>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인간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사상의 변화와 인간 의지의 힘이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자생적 변화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적응시키도록 만들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김이석, 2006: 49).

---

2) 하이에크는 영국인이 되었는데도 영국을 조국이라 부르지 않고 으레 ‘이 나라(this country)’로 호칭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의 책이 미국에서 출판될 때 이를 지적받았다.

혹, 영미인들이 사상의 힘을 인정하게 되더라도 그게 ‘대륙의’ 사상 때문이라고 핑계를 하면 안 된다. 대륙이나 영국은 모두 전체주의화의 추세에 있었는데 대륙 쪽이 그 추세가 빨리 진행되어 지금처럼 전쟁에 이른 것일 뿐. 내 조국 독일이 나치즘을 완성했지만 그 기원은 독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 영국인들이야. 그게 누구냐고? 바로 너희 나라가 배출한 토머스 카알라일(‘파시즘의 예언가’)과 휴스턴 체임벌린(‘히틀러의 세례요한!’)<sup>3)</sup>

독일이 눈부신 경제 성장과 지적 성장을 보이자 독일의 사상 또한 신망을 얻었다. 유럽은 독일의 사상에 경사되면서 당시 독일의 사상 흐름은 반(反)자유주의도 받아들였다. 즉 자유무역은 영국인이나 미국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영미의 정치는 구식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경멸하는 태도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sup>4)</sup> 사상이 그 “명성” 때문에 수용된다는 건 언뜻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될지 모르나 사상 전쟁에서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sup>5)</sup> 좌파 사상이 반드시 그 실체의 진실성이 정확하고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서 수용된 것이 아님을 알라. 지적으로 보이고, 정의롭고, 멋지고, 정치 성공자의 패션으로 여겨지고 ... 이를 모방하는 의식이 형성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하이에크는 올바르게 지적한다.

### 하이에크의 서구 문명관

하이에크는 그의 상용 어구인 자유주의가 서구 문명(Western Civilization)이 토대한 사상이란 식으로 노예의 길 전반에서 곳곳에 표현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기독교, 로마 및 그리스의 지적 사고로까지 연원함은 다소 과장일 것이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원시 공산사회로까지 연관시킨 것이 허풍임은 누구나 아는 데, 하이에크가 자유주의를 서구 문명 사상의 근원지로까지 족보를 연결함 또한 무리이다. 자유주의는 분명 근대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그의 세계관은 이렇게 좁게 수정하지 않는다면, 광의의 서구 문명에는 아브라함의 후예 중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녀도 있듯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비자유주의적인 문명도 당연히 들어 있을 것이므로 하이에크가 후자들이 나타남을 개탄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된다. 자식 많은 집안이라면 가장 저급한 자식이 집안을 물려받는 경우를 개탄할 것 없으니. 서구 문명을 좁게 정의해야만 좌파 사

3) 자유주의 문헌 속 ‘체임벌린’이란 동명이인들을 잘 구분해야 한다. 아서 네빌 체임벌린 (Arthur Neville Chamberlain)은 히틀러를 유화하고자 뭇헨 회담을 이룬 영국 총리, 윌리엄 헨리 체임벌린(William Henry Chamberlain)은 공산 혁명 후 초기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다 반공 및 반 전체주의로 돌아선 미국 언론인. 휴스턴 스투어트 체임벌린(Houston Stewart Chamberlain)은 나치즘의 사상을 확립한 자로 음악가 바그너의 사위. 윌트 체임벌린(Wilt Chamberlain)은 로버트 노직이 자유주의 이론을 전개하며 인용한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

4) Caldwell(2007: 75).

5) Yadav(2023).

상의 득세를 한탄할 의미가 있다.

## 스미스의 상업 사회를 전제

하이에크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주의 체제가 된 것은 **상업 사회의 형성**과 관련시킨다. 이것은 이탈리아 북부 상업 도시에서 출발하여 프랑스와 독일 남서부를 거쳐 네덜란드 및 북해 연안의 저지대 국가와 영국으로 확산하였고 이 진원지로부터, 신세계로, 나아가 유럽 대륙의 중앙으로 확산되었다고 본다. 이는 하이에크가 스미스의 역사 단계 이론을 암암리에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주는데 6) 유럽의 상업 발전과 개인의 자유 발전 사이의 인과성은 일단 타당하다. 하이에크는 곳곳에서 스미스와 연결되어 있다.

아니, 하이에크와 스미스 주장대로 상업 사회가 자유를 가져왔다면, 인간을 사고 파는 극단의 상업주의가 노예제도(slavery)나 국가 비호하의 독점을 가져온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인가? 아니다! 상업주의와 노예제도(및 국가 비호하 독점)은 같은 시기에 나왔을 뿐, 인과적으론 무관하다. **한 지역의 개인의 자유가 다른 지역 개인의 노예화로 이루어짐은 자유주의가 아니다.** “동인도회사는 인도 경제의 자연스러운 경제 발전을 왜곡하는 것”(Adam Smith). 인간 노예제와 국가가 부여한 독점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비(非)자유주의(illiberalism)의 표징일 뿐이다.7)

##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하이에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중 **정치적 자유의 우선권**을 인정한다(ex: 스위스 시계 산업은 정치적 자유 이전에도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면서 더욱 고도화되었다). 개인의 자유⇒과학 기술의 발전⇒학문의 발전....지난 150여 년간 세상의 모습을 바꿀 수 있었다.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자 의도치 않았고 예상치 못했던 부산물인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져왔고, 그 결과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는 일관된 주장이 보다 정교해졌다.”8)

여기에서 《노예의 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의 두 가지 차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물질적 속박(궁핍)에서 벗어나는 상태인데 하이에크 및 좌파들이 주로 쓰는 의미이고,9) 둘째는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로 예컨대, 사업의 자유,

6) 스미스는 유럽 역사 단계를 수렵시대⇒목축시대⇒농경시대⇒상업시대의 단계로 본다.

7) Yadav(2023).

8) Caldwell(2007: 69) ; 김이석(2006: 53).

9) TV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결혼 조건으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돈이 많아 궁핍하지 않아야

노동의 자유, 폐업의 자유...등을 포괄하는데 미제스가 이를 강조해 왔다. 하이에크 보기에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야 비로소 물질적 풍요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지, 좌파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

## 자유 의 주체는 개인이다: 개인주의

1장에서 하이에크가 자유주의 상실을 개탄하다 “개인주의”로 빠지는 이유는 자유의 주체가 개인이며 자유 상실이 곧 개인의 상실, 즉 전체주의로 가는 것임을 보이려는 것이다. 자유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는 시대 추세는 곧 그리스-로마, 기독교, 스미스, 흠에서 물려받은 개인주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치 지도자가<sup>10)</sup> 나치 혁명을 “반(反)르네상스”라 규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진실을 말한 것인데, 그들은 정말 개인주의를 말살하고 전체주의로 가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이며,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무관하다.<sup>11)</sup> 개인주의란 “인간을 인간으로(individual man *qua* man) 존중하는 것, 즉 자신의 영역이 아무리 좁게 제한될지언정 그 안에서 자신의 견해와 취향을 최고로 인정하고, 인간은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재능과 성향을 개발해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이다.<sup>12)</sup>

요컨대, 자유주의는 적어도 **의견, 신념, 사상, 그리고 취향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이념이다.**<sup>13)</sup> 그러나 **사실, 과학의 문제에는 개인의 자유가 의사가 적용되지 않는다.**<sup>14)</sup> 자유주의의 사명은 “... 인간이 적어도 자신의 삶을 형성하기를 시도할 수 있고, 그 삶에서 인간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sup>15)</sup> 자유주의를 팽개치고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liberty, freedom이란 단어는 한참 변질되어 버렸고 그나마 “**관용(tolerance)**”이란 단어 정도가 자유의 본질을 가장 잘 전달하는 단어로 남아 있다.<sup>16)</sup> 자유주의가 포기됨에 따라 그 자유의 주체인 개인이라는 개인주의 사상도 함께 포기되고 있었다.

## 자유 의 길을 어떻게 내버렸나?

---

한다는 말에 불과하며, 하이에크나 사회주의의자가 말하는 유형이다.  
10)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하이에크 및 어느 누구의 저술도 드러내지 않았다.  
11) 이 부분을 하이에크가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 “Individualism: True and False” 참조.  
12) 김이석(2006: 51).  
13) 따라서, 타인의 신앙을 ‘자유롭게’ 조롱함은 자유주의에 어긋난다.  
14) 지구가 달을 돌고 있다는 나의 ‘자유로운’ 생각은 자유주의에 어긋난다. 그러나, 과학의 외관이 있지만 과학이 아니라 얼밀히는 세계관(paradigm)에 불과한 경우, 그것을 근거로 ‘자유롭게’ 타인의 판단을 조롱함은 자유주의에 어긋난다. 빅뱅론이란 우주 패러다임으로 다른 우주 패러다임을 조롱하거나 압도할 수 없고 단지한 대안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제안할 뿐이다.  
15) Caldwell(2007: 71).  
16) 김이석(2006: 52) ; Caldwell(2007: 68-9).

1장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 하이에크가 곳곳에 흩어 놓은 답을 모아 축약하면 이렇다: 자유주의가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를 신속히 가져오지 못함은 당연했고, 자유가 가져오는 점진적인 부의 증가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유주의의 결과를 굳이 자유 정책의 산물이랄 것없이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당연히 얻는 진보를 줄 뿐인 “소극적(negative)” 신조로 여기게 되었다. 자유주의는 있으나 마나 그저 그런 결과만 준다는.

*달리 보면, 자유주의의 성공 자체가 자유주의 쇠퇴를 가져왔다:* 자유주의가 지금껏 가져다 준 큰 성과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당장 자유주의가 해결 못한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자유주의를 느리고 비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해묵은 교리인 자유주의를 버리고 사회를 완전히 개조해야 더 많은 발전을 속히 이루겠다는 기대가 확산하였다. 이들은 자유주의를 버리면 그것이 지금까지 준 성취가 사라지기보다는 불멸의 소유물로 남을 것으로 보았다. 자유주의 정책의 느린 진전에 대한 조바심, 반사회적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품을 만한 짜증, 자유로 경제가 좋아지자 더 큰 부를 얻으려는 야망 때문에 현존 상태를 가져다준 자유주의를 버리게 된다.<sup>17)</sup>

조강지처의 헌신으로 겨우 굶지 않을 정도가 된 거지 남편이 이제 미학, 스포츠, 고등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을 불평하다 유명 가수 공연장에서 날라리 여자 관객을 만나곤 조강지처를 버리는 꼴인데 그는 앞으로 예술은커녕 원점에서 끼니를 다시 걱정해야 함을 모른다. 이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신속한 결과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더 효율적일지 모르나 자유 사회를 보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sup>18)</sup>

이런 상황이 되면 자유 사회에서 발견되는 자생적 힘을 어떻게 최선으로 활용하 기보다 . . . 자생적 힘을 배제하고, 시장이라는 비인적인(impersonal) 익명의 메커니즘 대신 집단 목표로 몰아가는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명령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런 체제를 정당화하느라 좌파 카를 만하임은 결혼을 위한 이혼이란 궤변같이 “자유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freedom)”이라는 말도 안 되는 괴이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고 하이에크는 그를 증오하고 흠보았다.<sup>19)</sup>

17) Caldwell(2007: 71-72) ; 김이석(2006: 56-58).

18) 하이에크, 《노예의 길》 1956년 판 서문.

19) 그 카를 만하임은 《Man and Society in an Age of Reconstruction》(1940)에서 “전통적 자유방임원리를 현대 대중 사회에 적용함은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는 황당한 경고를 했는데 하이에크는 이에 치열하게 반격했다. 그리고 하이에크는 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유방임원리를 고수함이 아둔한 짓”이라고 《노예의 길》에서 썼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가 증오한다는 좌파 카를 만하임에게 맞장구를 쳐준 셈이 된다.

## 하이에크의 대실수?

하이에크는 자유주의를 포기하는 과정을 논의하기 직전에, 전혀 쓸데없는 다른 주제를 건드렸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그의 《노예의 길》뿐 아니라 그의 이론 전체에 두 가지 면에서 큰 자충수 역할을 한다.

(1) 첫째 자충수를 보자.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들 가운데 자유주의를 변화 없이 정체된 신조가 되게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즉, 구체적 내용이 한꺼번에 고정되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경직된 규칙들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능한 한 최대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힘을 이용하는 한편,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강제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기본원리는 무한하게 변용되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경쟁이 가능한 한 최대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체제를 의식적으로 창출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제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거친 경험 법칙들에 대한 집착, 특히 자유방임의 원리에 대한 아둔한 고집만큼 자유주의의 대의에 해를 입힌 것은 없다.”<sup>20)</sup>

좌파가 아니라 하이에크가 한 말이다. 하이에크는 본래 그는 서구가 버린 자유주의가 곧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라 규정해 놓고도 그것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열렬히 옹호할 가치가 아닐 수 있으며 그것을 포기함이 더 자유주의의 본의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 19세기의 이상, 혹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의 원칙 ...”으로(하이에크의 원문에 따르면, ...what are vaguely called nineteenth-century ideas or the principle of laissez faire ...) 되어 있다(김이석, 2006: 49, 하단 9행 ; Caldwell, 2007: 66, 하단 7행). 이 문맥으로 보나 본질로 보나, 버려진 **지난 세기의 이상(즉 자유주의)**은 곧 **자유방임주의**와 동의어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전술한대로 김이석(2006: 56) 및 Caldwell(2007: 71)에서는 “자유방임원리에 대한 아둔한 고집만큼 자유주의의 대의(liberal cause)에 해를 입힌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의 말을 기계적으로 종합하면, 하이에크는 “한편으로는 자유방임주의가 자유주의의 이상이라 규정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그 이상을 고수하지 말라”는 괴이한 논리를 편 셈이다. 그렇다면, 1장에서 서구인이 자유의 길을 고수하지 않고 내버린 점을 하이에크가 개탄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이다.

(2) 둘째 자충수를 보자. 하이에크의 또 다른 실수는 후술하는 노예의 길 《9장》에서 제안한 “보편적 기본소득제(UBI)” 아이디어이다 <sup>21)</sup>. 마르크스 대신 존 롤스(John

20) Caldwell, 2007: 70-71, 김이석: 2006: 55-56.

21) 하이에크의 이 생각은 노예의 길 9장에서 출발하여 자유의 헌법(1960), 『법·입법·그리고 자유』

Rawls)로 확장한 복지주의가 자유주의에 대한 주된 공격수로 자리바꿈한 오늘날, UBI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명분으로 자유주의를 왜곡하고 경쟁을 배격하고 국가가 특혜를 특정 계층에 배분하는 중요한 근거로 오용될 수 있다. 이재명 진영이 자신의 “기본소득제”가 하이에크 《노예의 길》 9장에서 따왔다고 주장하면, 자유주의자는 반론 변명이 궁색해지는데, 아마도 나중에는 하이에크를 강판시키고 노직(Robert Nozick)이나 아인 랜드(Ayn Rand)를 구원투수로 부를 각오까지 해야 한다(Kim, 2021).

이 두 가지 때문에 하이에크는 오늘날 반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자유주의자에 반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미 당신네의 지적 선조인 하이에크가 2장에서 자유시장, 자유 경쟁을 고집스레 집착하지 말라고 선언했고, 9장에서 기본소득제의 복지주의도 강조했으니 당신들이 진정 그 제자라면 이를 받아들여게!”.

이것은 하이에크 이론의 큰 허점으로 볼 수 있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자유주의와 충돌하는 요소들도 별 생각없이 심어 놓았는데, 그중 몇 가지는 오늘날 이념 전장에서 오히려 아군쪽을 향한 클레이모어 지뢰(claymore mine)가 되었다.*

### FDR: 부적합한 출연?

하이에크 1장은 또 다른 당혹을 주는데, 그것은 『자유주의 애가(哀歌)』(The Lamentations in Liberalism)라 할만한 이 도입부가 로크, 흄, 스미스같은 위대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시장 경제와 상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FDR)의 말로 시작하는 점이다. 이 모순을 풀고자 Yadav(2023: 20-21)는 FDR이 실은 자유주의였다고, 그가 초기에 방만한 재정을 억제했고, 자신의 재정 팽창에 갈등을 가진 보수적 재정관을 가졌으며, 특히 2차 뉴딜에서 경쟁적 시장질서 복귀를 주장한 점 등을 궁색하게 거론한다. 이는 ‘자유주의의 선지자 하이에크가 등장시켰으니 자유주의 인물이어야 한다(should be)’는 의식이다. 완전히 틀려먹은 변증이다. FDR의 진정한 자아가 진보적 보수주의자냐, 보수적 진보주의자냐는 논쟁은 주자학적 사변이고, 적어도 그가 실천한 정책은 넥타이만 매었을 뿐, 미국 역사상 가장 명백한 사회주의이다. 먼저, 하이에크가 각 장의 제사문에 인물을 출연시키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한 수법은 오히려 반(反)자유주의자 배우를 픽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두 방식이 있다. 첫째는 자유를 억압하는 흑독한 말투를 독자가 직면하게 만들어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무솔리니(4장), 레닌과 트로츠키(9장), 카(11장)가 그 예이다. 둘째는 반자유주의자의 어록 속에서 자유주의에 부합되는 말을 포착하여, 그들이 한때 자유를 강조했다 지금은 반자유주의자로 돌아선 표리부동의 인물임을 부각하는 수법이다. 카를 만하임(6장)과

---

의 제3권(1979)에서 계속 제시된다.

FDR (1장)이 그 예인데, 반자유주의자들의 입으로 직접 자백한 바있는 자유주의 칭송 발언을 재생시켜 그들에게 수치를 안기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경전 첫 장에 가장 적합한 악역 엑스트라로 FDR을 골랐던 셈이다.

이상을 감안하고, 또 제1장의 FDR의 제사문은 술어가 없고 명사절로만 되어 있음<sup>22)</sup>도 유의하면서 해독해 보자.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기업 체제가 이 세대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직 시도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기본 테제인 프로그램.

A program whose basic thesis is, not that the system of free enterprise for profit has failed in this generation, but that it has not yet been tried.

여기에서, FDR은 자유주의(‘이윤을 추구하는 자유기업체제’)가 제대로 실천된 후 성공 실패를 판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제대로 실행되어 보지도 않은 상태라고 제 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세인들은 **자유주의를 극단으로 실행했더니 거대한 실패가 나타나 이를 교정하고자 FDR식 사회주의가 불가피했다고 말하는가!** 바로 이걸 드러나게 하는 게 하이에크의 의도였다. 경제 자유화의 개혁을 내세우며 출발했다 그걸 제대로 실천해 보지도, 혹은 아예 출발도 못하고 개혁 초기에 불평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금방 경제자유화 정책의 실패로 단정하고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예는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집권한 밀레이도 같은 위협을 받고 있다. FDR의 입을 차용해 하이에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자유주의라는 처방약을 조금 먹었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약을 버리기보다 충분히 더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길, 길, 길. . . 그리고 마지막 길

애초에 하이에크에게 《노예의 길》의 영감을 직접적으로 준 건 힐레어 벨록의 『예종 국가(Servile State)』<sup>23)</sup>로 보인다. 하이에크 노예의 길<sup>24)</sup>을 따르다 보면 다른 신작로들과 교차한다: 풍요의 길<sup>25)</sup>, 뉴딜의 길,<sup>26)</sup> 자유의 길<sup>27)</sup> 반동의 길<sup>28)</sup>, 신전체주의의 길<sup>29)</sup>. . . 자유의 길을 버린 서구인들은 이제 노예의 길로 들어섰다. 사회주의자들

22) 김이석박사님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술어를 추가해 주었다(2006: 47). 하이에크는 더 완결된 문장을 인용했어야 했다.

23) The Servile State(H. Belloc, 1912). 책 출판 연도, 내용, 그리고 타이틀에서 받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하이에크는 힐레어 벨록을 《노예의 길》 제7장의 제사에서도 인용한다.

24) The Road to Serfdom(F. A. Hayek, 1944).

25) Road to Plenty(W. T. Foster & W. Catchings, 1928).

26) Road to the New Deal(R. Daniels, 2018).

27) Road to Freedom(N. Barry, 1994).

28) Road to Reaction(H. Finer, 1945).

29) Road to NeoTotalitarianism(Jean-Philippe Beja, 2019).

의 유토피아 높음이 원인이지만 그에 넘어간 서구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른 길로도 말고 그냥 되돌아가라는 것이다.

하이에크 제1장은 따라서 《노예의 길》 전체의 결론도 예고한다. 존 밀턴을 인용해 그걸 미리 말하자면, “...지옥을 빠져 나가 빛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하지(long is the way and hard)만...” 노예의 길에서 돌이켜 고상한 길(high road)로<sup>30)</sup> 돌아가라는 것이다(Yadav, 2023).<sup>31)</sup> 인간을 타락의 길에 빠뜨린 악의 수괴 사탄(satan)의 말에서 인류가 자신이 갈 길을 시사받는 것은 역설이다.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보다 우리의 적이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알고 있음도 사실이다.

‘탕자’(누가복음 15장)의 귀갓길은 풍요와 안식이 보장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이나, 자유주의 버린 자들이 돌아갈 길은 그런 보장이란 없으며(제9장: 보장과 자유) 오직 스스로 수고하며 자유롭게 성공하거나 때는 자유롭게 실패함이 기다리는 길이다. 가부장국가(paternal state)도 보장국가(security state)가 아닌 자유국가(liberal state)로 가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결론이다.

---

30) high road는 산 자의 길 혹은 고상한 길, low road는 죽은 자의 망령이 걷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 아일랜드 민요 Loch Lomond 중, ‘O ye’ll take the high road and I’ll take the low road, And I’ll be in Scotland afore ye..’는 영국 명예혁명으로 쫓겨난 제임스 2세를 복위하려던 카톨릭 세력의 봉기(자코바이트 반란 Jacobite risings)에서 패한 아일랜드 병사가 자신이 처형되고 그 친구는 방면될 것을 알고, 자신은 죽어 지하 세계의 망자의 길로 고향에 바로 닿을 것이되 친구는 나중에 산과 길을 넘어 나중에 닿으리라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전자가 더 빠른 길이다. 따라서, 후자인 high road는 지름길(첩경)보다 현실의 길, 고상한 길로 해석하는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31) 존 밀턴, 실낙원(2019/2023), 박문재 (역), p. 73. 이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악의 무리의 수장인 사탄이 천국을 다시 장악하려는 결의를 부하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 제14장의 제사로도 존 밀턴의 글을 인용한다.

##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발제: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 공공선택학)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2장의 제사(題詞, epigraph)는 그의 15개 장 제사문 중 특히 강렬한 호소력이 있다. 이 글은 독일 낭만주의 시인 훔덜린(Johann Christian Friedrich Hölderlin, 1770-1843)이 지은 《히페리온》 중 주인공 청년 히페리온이 새로 만난 친구(아라반다)에게서 무한한 자유 정신을 가진 그리스적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눈 대화 중에 나온다.<sup>32)</sup>

국가를 세상의 지옥으로 만든 건 늘 바로 인간이 국가를 자신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

Immerhin hat das den Staat zur Hölle gemacht, daß ihn der Mensch zu seinem Himmel machen wollte(1797). (\*히페리온 1장 ‘짙뻘힌 우정의 화원’ 중).

하이에크에게 이 강렬한 제사문의 영감을 준 훔덜린의 생애를 잠깐 보자. 그는 1770년 독일 슈바벤 지방 라우펜에서 수도원 관리자인 하인리히 훔덜린의 아들로 출생하지만 유아 때 부친이 사망하여 어머니는 재혼했으나 수년 후 새 부친도 사망한다. 1788년, 튀빙겐 신학교에 진학한 후 성직자가 되기를 원한 모친의 기대를 외면하고, 셸링 등과 교류하며 칸트와 고대 그리스 고전에 몰입한다. 이때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 이상에 감동하기도 했지만 자코뱅의 공포 정치는 혐오했다. 석사학위를 받은 후 성직자의 길을 아니라 문학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당시 유명 작가였던 프리드리히 실러와 교류한다. 실러는 훔덜린에게 가정교사직을 소개시켜주고 자신의 간행물에 그의 작품들을 실어주며 훔덜린을 후원했으며 훔덜린은 실러를 통해 괴테, 피히테, 노발리스와 같은 대문호들과 교류했고 이때 그의 유일한 소설인 히페리온을 시작한다. 1795년, 훔덜린은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은행가의 집에 가정교사가 된다. 안주인(주제테 공타르)과 바람을 피우다 들통나 쫓겨나고 정신착란 증세가 시작된다. 곧 주제테도 병사하자 그의 병도 악화되고 생계가 어려워져 도서관 사서를 하며 간신히 생활한

32) 그 결말은 경박한 아라반다가 히페리온의 이런 차원을 이해하지 못함에 히페리온이 크게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것이다. 《히페리온》은 그의 멘토에 해당되는 아다마스, 연인인 디오티마, 그리고 히페리온의 지적, 감성적 성찰들을 편지로 전달받되 실제로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 친구 벨라르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히페리온과 디오티마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에서 연유하며, 히페리온 중 수많은 개념들이 그리스 신화 스토리와 관련이 있다. 국내 번역본으로는 홍경호 역《히페리온》. 범우사 참조.

다. 그 후, 반체제활동을 했다는 무고를 당하여 수사받다 정신착란 증세 발작하자, 튀빙겐의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 후 몇 달만에 퇴원했지만 폐인 상태가 된다. 이때 한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때 그의 소설 『히페리온』을 감명 깊게 읽은 목수(에른스트 치머)가 훔달린 같은 아름답고 찬란한 영혼이 파멸함은 몹시 애석하며 보호자를 자처하여 훔달린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준다. 아버지의 예수도 ‘목수의 아들(carpenter’s son)’로 불렸다고 한다. 에른스트 치머 집안 가족의 친절함 덕에 훔달린은 본래 3년을 못 넘길 것이라는 의사 진단을 비웃으며 훔달린은 그 집을 자신의 지상 천국으로 삼아 36년을 기생하다 죽는 바람에 치머 가족에게는 지상 지옥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훔달린은 한국 자유주의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한국에서도 우리 같은 자유주의자의 저술에 감동받는 독자가 분명 있을 것이니, 만년에 우리가 예컨대 치매나 중풍에 걸려 폐인이 되더라도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적어도 3년 정도 사적인 재택 돌봄을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전혀 두려워 말고, 자유주의 신간이 나오면 목수인 독자들에게 증정본을 가끔 보내며, 남의 집 가정교사직만은 가급적 피하면서 맹렬히 자유주의를 갈파하기만 하면 될 듯하다.

### 하이에크는 왜 훔달린을 등판시켰나?

훔달린의 시구는 다음으로 이어진다.

“국가란 생명의 알곡을 둘러싼 거친 껍질에 지나지 않는 것. 그것은 인간의 열매와 인간의 꽃으로 이루어진 정원을 둘러싼 담.” “그러나 흙이 메말라 있을 때 정원을 둘러싼 담이 무슨 도움이 되랴? 그때 도움이 되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 “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오, 영감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인민들의 봄날(springtime of the peoples)**을 다시 가져다줄 것이다(\*강조 폰트는 역자의 표기). 거기서 국가는 당신을 이리로 불러낼 수 없도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방해하지는 못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올 것이라, 당신은 당신의 전능한 환희로 올 것이며, 우리를 황금 구름으로 감싸고 죽음보다 높게 들어 올릴 것이며, 우리는 놀라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원래 모습 그대로인지, 즉 꽃피는 봄이 거기서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별에게 묻던 가난한 우리인지를 궁금해할 것이다. 당신은 이 일이 언제 올지를 내게 묻는가?”(\*김행범 역). 33)

훔달린의 이 구절은 급진적 성향의 고전적 자유주의 인식인 “인민들의 봄(springtime of the peoples)”, 즉 1848년 반군주제 봉기로 유럽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을 잘 묘사한 것을 보여준다(Yadav, 2023).

33) 《히페리온》의 독일어 원문 구하기가 어려워 위 부분은 영문판을 번역한 것임.

하이에크는 참혹한 2차대전 말기 영국에서 《노예의 길》을 쓰면서 왜 독일 낭만주의 시인을 소환했을까? 한국에서 훔덜린의 번역서를 펴낸 출판사(범우사)는 이 책이 1차 세계 대전 전몰 독일 병사들의 배낭에 거의 어김없이 들어있었다고 광고했고 당시 이십대 중반의 필자도 이에 좀 속았다. 이 책이 당시 10대 중후반이었을 하이에크를 포함한 독일 청소년의 감성을 분명 강렬하게 찔렀을 것이다. 사십 대 중반이 된 하이에크가 영국에서 《노예의 길》을 쓰면서 정신병자 훔덜린을 인용하는 하이에크의 심정은 그려보기 어렵지 않다: “내 조국 독일이 지금 비록 전체주의의 상징이 되어 있지만 사회주의의 진정한 기원은 내 나라 독일이 아니라 이 나라 영국과 프랑스야 (특히 하이에크가 명시한 칼라일, 체임벌린, 생시몽 같은 자들!). 비록 우리 독일 국민이 정치적, 정신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이기적이고, 노예적이어서 고대 그리스의 자유인과는 정반대되는 꼴을 지금 보이지만 상실한 자유를 한탄하고 그걸 갈구한 시인이 독일에 있었음을 알라, 이 나라 영국의 너희들은 과연 이만큼의 인식이 있는가!”라는 메시지였을 것이다.<sup>34)</sup> 물론, 자유를 버린 자신의 조국 독일 국민을 혹독하게 비판하지만 말이다.

### 유토피아는 사회주의자들의 식량

하이에크 2장의 키워드는 **유토피아(Utopia)**이다.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유토피아, ‘경제적 자유’라는 유토피아, 무엇보다도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라는 함정이 가져온 피해를 하이에크는 2장에서 자세히 보여준다. **유토피아의 환상이 없었다면 사회주의라는 종교는 현재 신도 수의 10%도 모으지 못했을 것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자신의 정체성 위장에 성공하자 자유와 상극인 사회주의가 ‘자유를 가져오는’ 이념으로 자신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먼저, 사회주의가 자유와 상극임은 어떻게 아냐고? 급진 자유주의가 사회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우도 많은데도 어째서 이 둘을 상극이라 보냐고? 하이에크는 그 이념 창시자(ex: 생시몽)가 원래 구상한 세 요소를 보라고 한다. 생시몽의 주장은 ① 사회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강압적인 영적 힘을 갖춘 강력한 독재를 지지한 점, ② 자유주의의 상징인 프랑스 대혁명의 반동으로 나온 것이 사회주의라는 점, ③ 사상의 자유를 사회의 근본 악으로 간주하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보면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와 상극임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사회주의자 시조라는 생시몽은 “**내가 구상한 사회주의적 계획기구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가축같이 취급(treated as cattle)될 것**”이라고 호언한 수구 반동 인간이었다. 하이에크는 생시몽의 이 험한 말을 집요하게 붙잡고 공격했다. 그리고 자신의

34) Yadav(2023)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임.

《반혁명의 과학》에서<sup>35)</sup> 생시몽을 과대망상증적 몽상가(megalomaniac visionary)로 몰아붙였다: *Saint-Simon*은 “상시 꿈에 빠진 자”(상시몽. 常時夢), “생이 곧 꿈인 자”(생시몽. 生是夢)인 헛꿈쟁이!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의 적인 국가 계획의 자만의 뿌리는 데카르트(R. Descartes)로 보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근원으로 콩트(A. Comte)와 특히 생시몽(Saint-Simon)을 주적으로 삼아 집요하게 공격한다. 이에 밀리고 지친 생시몽의 제자들은 나중에 생시몽의 문헌 중 이 부분을 삭제해 버렸다. 그러나, 욕먹기 합당한 그의 말이 이런 짓으로 숨겨지기는커녕, 제자들이 원전을 무단 삭제했다는 사실마저 기록에 남게 되어 사회주의자 생시몽의 반동성(reaction)만 더욱 부각되었다.<sup>36)</sup> 하이에크의 논리에 따르면, 반동주의(reactionism)에서 출발한 사회주의자가 자신은 자유(대개, 그들 나름의 **사회적 자유**)를 지향한다며 오히려 자유주의자를 반동주의자라는 의미로 극우라고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다.<sup>37)</sup>

## 새로운 자유

결국, 사회주의 시조 생시몽이 워낙 선명히 부각한 반동성, 자유와의 분명한 상극성 때문에 사회주의는 자신이 자유 친화적인 이념이라고 표방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좀 시간이 지난 후 자신(사회주의)에게 민주주의라는 옷을 적당히 입힌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로 변신한 뒤 자유주의와 공존 가능한 이념인 듯이 슬그머니 등장했다. 그러나, 토크빌이 가장 잘 지적했듯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화해 불가의 갈등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지만 사회주의는 이를 제한한다”...“민주주의는 각인에게 모든 가능한 가치를 부여하지만, 사회주의는 각인을 단지 요원(agent),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equality)이라는 한 단어 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민주제는 자유의 평등을, 사회주의는 제약과 예측의 평등을 추구한다.”<sup>38)</sup>

이런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본성 때문에 사회주의는 자신을 “자유”와 친화적인 이념이므로 광고하는 방식은 자신이 기존의 정통 자유주의가 주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35) Hayek(1952),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Studies on the Abuse of Reason, Liberty Fund, p. 222

36) Caldwell(2007: 76-77). 특히 각주 2번.

37)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좌파에서 나름 논리를 세워 반박한 책이 좌파학자 파이너(Herman Finer)의 《반동의 길(Road to Reaction)》이다. 정환용(역), 2010, 전남대 출판부. 파이너는 하이에크를 반동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사회주의야말로 반동에서 출발했으며, 한국 좌파 일각이 옹호하는 북한의 조선 시대식 봉건 세습체제는 가장 반동적 체제이다.

38) Caldwell(2007: 77) ; 김이석(2006: 64).

자유”(new freedom), 곧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누리게 해준다고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의 이 경제적 자유는 미제스(Mises)적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라는 것이다.<sup>39)</sup> 거기서 자유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다. 즉,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사업의 자유, 거래의 자유 등을 강조하는 **미제스의 경제적 자유**와 거리가 먼 것으로 결국 국가가 간섭하여 **물질의 궁핍을 해소하고 평등을 이룬다**는 것에 불과하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주의의 도래는 결핍(necessity)의 영역에서 자유(freedom)의 영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 없이는 이미 얻은 정치적 자유는 “가질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여러 시대에 걸친 자유를 향한 투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고전적 자유주의가 담고 있는 본질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는 다른 새 자유라면서 “경제적 자유” 즉 물질 상태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세웠는데 FDR이 그의 자유 개념에 이를 그대로 포함했음은 그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도금된 사회주의(freedom-plated socialism)”임을 명증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를 “새 자유” 혹은 “더 큰 자유” 등으로 부르며 어쨌든 일종의 자유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자신들이 준다고 하면서 자유를 사회주의와 연결시켰다. 이리하여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자유주의와 vs. 사회주의’의 싸움 구도는 사라지고, ‘자유 vs. 또 다른 자유’의 싸움 구도가 되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가 (일종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착각을 주게 되자 대중은 물론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조차 도금된 사회주의에 끌려들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자유**로 인도해 준다고 여기면서 그리로 끌려들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 갈등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주의자들이 자유라는 이름의 오래된 당명조차 강탈할 수 있게 해주었다: “*Freedom Socialists Party*”이란 이름의 미국 현대 정당의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는가?

변장한 사회주의로 끌려드는 이 경우는 말만 자유로 가는 길(Road to Freedom)이지 실제로는 **예속으로 가는 길(High Road to Servitude)**이다.

자유주의 전통의 명백한 상속자인 지식인의 태반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지식인들이. \*역자 추가*) 그것이 자유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져온다는 점을 상상할 수 없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40)</sup>

39) 김이석(2006: 66).

40) Caldwell(2007: 78) ; 김이석(2006: 67).

달리 말하면,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주는 새 자유를 준다는, 사회주의가 만든 유토피아에 현혹된 것이다. 이 점에 이르자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제시한 유토피아가 허구였음을 하나하나 밝히는 증명을 이어가는데,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척적이라는 게 허구임을 하이에크는 주로 예시를 통해 잘 증명한다.<sup>41)</sup>

나치 독일 병사를 정확히 살상하는 영화 《애너미 앳더 게이트 Enemy At the Gates》에서 소련 저격병(배우: 주드 로)이 결코 의로운 심판자가 아니며, 후일 중국 및 한국에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싸운 소위 항일 공산당 역시 모두 좌파이며, 그들이 대적한 일본 군국주의 파시스트 역시 좌파이며, 그들 모두는 연합하여 자유주의와 대적하고 있다.<sup>42)</sup>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 기념식에서 히틀러 파시즘을 붕괴시켰음을 자찬함에 한국 관광객이 부지 중 박수쳐 주는 건 바보같은 짓이다. 하이에크의 요지는 이렇다: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와 “빨띠 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두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식 사회주의이고 후자는 나치즘이다. 이 경우, 악의 적은 우리 편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일 뿐.*

## 무엇이 더 악한가? 민주적 사회주의 vs. 사회적 민주주의

여기에서 쉽지 않은 객관식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다음 중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 2장(위대한 유토피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①사회주의 ②민주주의 ③사회적 민주주의 ④민주적 사회주의

하이에크는 민주주의가 사회적 수요, 예컨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악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민주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인데, 이것은 마치 군사 작전의 각 단계를 민주적 수단으로 실행하는 것만큼이나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그가 재직했던 런던 정경대학 동료 교수들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허구를 혐오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환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의 2장은 사회주의를 민주적 절차로 이룩한다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가장 악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주로 공격했던 것이다.<sup>43)</sup> 정답은 ④이다.<sup>44)</sup>

41) 그 증명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맥스 이스트먼: 스탈린주의=(수퍼) 파시즘이고, 스탈린주의=사회주의이다. 따라서 파시즘=나치즘. ②사회주의자가 나치지도자, 파시스트 지도자로 쉽게 변신한 선례가 많더라: 무솔리니 자신, 프랑스 비시정권의 라발, 사회주의자였다가 나치하 노르웨이 총리 크비슬링. ③유럽대륙에서 공부하고 영국으로 귀국하는 학생들이 공산주의자와 나치주의자 성향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다. ④히틀러 스스로 민족사회주의(NAZI)가 곧 마르크스주의라고 선언하더라 등이다. (하이에크 2장 미주 10).

42)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파시즘은 ‘정치의 미학화’이고 공산주의는 ‘미학의 정치화’일 뿐이다. 이 이분법이 정확히 모든 개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나 그 둘의 차이는 분명 가공적임을 보여준다.

43) 한국 정치 상황 속 대중, 정치인이 민주적 사회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민사당과 사민당의 차

## 유토피아가 문제인가?

이쯤 되면 우리는 *유토피아의 가공성*이 비난받아야 할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2장의 제사문에서 오해받기 쉬운 부분도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틀린 판단이다. 하이에크가 신랄하게 꼬집은 것은 유토피아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주는’ 유토피아라는 점이다. 오히려, 하이에크는 자유로운 사회로 가는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자유주의적 유토피아(a liberal Utopia)*, 즉 있는 그대로의 것을 옹호하거나 희석된 사회주의가 아닌, (노동조합을 포함한) 강자의 감수성을 아끼지 않고, 너무 심하게 실용에만 빠지지 않으며, 오늘날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주의적 급진주의(truly liberal radicalism)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권력과 영향력의 유혹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고,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작더라도 이상을 위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지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45)

제임스 뷰캐넌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사회주의가 과학적 증거와 모순되는 상황에서도 제도 변화를 위한 계획의 지지자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게 만든 것은 *사회주의의 영혼(soul)*이었음을 지적하고서 고전적 자유주의도 영혼이 나타나 자유주의를 끌고 가야 함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영혼(Soul of Classical Liberalism)*이란 곧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뷰캐넌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에게는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shining city on a hill)*”라는 비전으로 대중을 미국 청교도 국가의 이상으로 끌고 갔음에 비해 그 후임자 조지 부시에게는 그런 비전이 없었다.46) 하이에크는 자유 사회라는 유토피아의 비전을 요청한다.

이념 전쟁을 과학, 성과, 그리고 기술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려는 건 어리석은 사고이다. 그 전쟁의 모든 요건이 결핍된 경우에도, 오직 이념이 주는 유토피아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이에크는 정신, 사상, 가치. . .당신이 뭐라 부르든 그것은 물질 세계에 대한 우위성(primacy)이 있다고 본다. 이 점을 가장 절실히 깨달은 것이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였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의 생산을 획기적 늘릴 ‘기술’이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믿음’을 가르쳤고 그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유물론자가 아니라 확실한 유심론자였다.

---

이를 바로 이해하는지는 아주 불확실하다.

44) 김이석(2006: 72).

45) Hayek(1949), "The Intellectuals and Socialism," p. 432

46) Buchanan(2000).

하이에크가 2장의 타이틀에서 유토피아를 ‘위대한(great)’ 것으로 묘사한 것은 민주적 사회주의자의 거창한 허풍에 대한 경멸이었지만, 그도 곧 자유 사회를 구축하는 유토피아가 줄 글자 그대로 위대한 역할을 기대한다. 유토피아를 구사하여 파멸로 인도하는 사회주의가 저리 번성할 수 있었다면, 개인의 가치와 자율을 확실히 고양하는 자유주의가 그런 도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하이에크는 시사한다. 자유 사회라는 건강한 유토피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관료 절차에 순응된 기술 관료나, 가시적인 결과에 주로 착안하는 경험 과학자나, 하이에크가 유독 기피하는 실용주의에만 매몰된 자, 당쟁 전문 정치 기능공이 자유 사회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쯤도 부수적으로 시사한다.

## 레닌의 그늘

《노예의 길》 미국판은 처음 2천부가 1944년 9월 18일 월요일에 출판되었고 헨리 해즐릿은 우호적인 서평을 발표했다. 9월 28일까지 1만 7천부가 발행되고 출판사는 약간 히트를 쳤다. 그때,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순회 편집자(roving editor)'였던 맥스 이스트먼(Max Eastman)이 이 책이 매혹되어 편집장 드윌 월리스에게 편집을 요청하자 축약판으로 1945년 4월에 출간된다. 이것은 백만 부 이상이 인쇄되는 대히트를 친다. 하이에크가 책 홍보 차 도미한 첫 강연에 3천 명 넘는 청중이 몰려들었고 라디오로 방송되었다. 그러나 20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심지어 1945년 2월호에 실린 만화판)만 보고 온 청중이 아주 많았음에 당황했다. 맥스 이스트먼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노예의 길은 대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이 미국 여행에서 하이에크는 '시카고 경제학파'를 창설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학자인 애런 디렉터, 밀턴 프리드먼, 조지 스티글러를 만난다. 이 연결로 이들은 모두 1947년 하이에크가 나중에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를 창설하는 첫 회의에 참석했고 몇 년 후 하이에크는 런던에서 시카고 대학으로 옮긴다.<sup>47)</sup>

이상에서 두 가지는 주목할만하다. 첫째, 저 맥스 이스트먼이 바로 하이에크의 2장(김이석, 2006: 67-68)에서 “레닌의 친구”로 나오는 그 사람이다. 레닌의 절친한 친구로 공산주의에 기울어져 있던 맥스 이스트먼조차 ‘공산주의는 곧 파시즘’이라고 규정하자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우기던 사회주의 진영 이론가들이 크게 동요했다. 공산주의자로 레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레닌 사상을 극도로 증오할 《노예의 길》이 엄청난 히트작이 되도록 만든 일등 공신 노릇함을 저승의 레닌은 어떻게 이해할까? 둘째, 레닌은 공산주의 이념 운동을 주도할 젊은 전위대 육성 운동을 벌였는데 이를 **레닌주의(Leninism)**라 부른다. 나중에는 좌우 어느 이념에 상관없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이에크가 자유주의 이념 공동체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를 급조한 걸 Yadav(2023)는 일종의 레닌주의라 평가하는데, 아주 틀린 명칭은 아니다. 하이에크는

47) Caldwell(2027: 18-23).

레닌의 절친에게서 결정적 도움을 받았고, 레닌주의식 이념 공동체를 모방했다. 저승에서 하이에크는 레닌에게 약간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 미완의 싸움: 하이에크 vs 하이데거

《노예의 길》 1, 2장의 응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이 책의 발간 연도보다 약 170년 앞선 인물의 지면 속으로 자연스럽게 되돌아간다. 1장에서 본대로 여기서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1981, 2권-2장-9번째 문단)이 다시 나타난다.<sup>48)</sup> 1장(버려진 길)에서 하이에크는 우리를 **타인에 대한 선의 없이 오히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스미스의 예지로 이끌었다. 2장(위대한 유토피아)에서는 국가가 사람의 천국을 만들지 못하며, 천국을 만들겠다는 **선의가 오히려 지옥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하이에크 눈에는 국가가 반드시 자유를 억압하기보다 오히려 “계획을 통해”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는 카를 만하임은 바보이거나 자유 사회를 전복하려는 자로 보였을 것이다. 하이에크의 사고의 근원에는 애덤 스미스가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훔덜린을 통해, 애덤 스미스가 품은 자유주의의 위대한 명제를 재선언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치즘의 실존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오히려, 바로 그 훔덜린을 자신의 특유한 신화시(神話詩)의 기반으로 차용하고 왜곡해 나치즘 미학의 핵심 요소로 가공했다(Yadav, 2023: 19). 시간상으로는, 하이데거가 먼저 훔덜린을 전체주의의 기반으로 악이용해 먹었고, 나중에 이에 맞서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 2장에서 그를 자유주의의 강렬한 아이콘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이데거의 복잡한 연인, 제자, 그리고 피해자인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하이데거가 나치즘에 기운 이유는, 한편으로는 웅장함에 관한 환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감에서 나온 일종의 정신적 치기, 곧 교정할 수 없는 낭만주의 때문이었다(Lilla, 2018: 49).

하이에크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젊은 세대의 의식을 장악하고자 싸우는 우리 시대 이념 전선에 주는 함의를 얻을 수 없을까? 유토피아는 자유, 책임, 자율이라는 미밋해 보이는 이성적 가치보다는, 평등, 더불어 삶, 복지 등과 같은 열렬한 낭만에 더 편

48)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자신이 공익을 얼마나 증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을 지원해 주기를 더 좋아함으로써 자신의 보장만을 도모하고, 그 산업이 가장 큰 가치를 얻도록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하며,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그가 의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여 그것이 사회에 항상 더 나쁜 것도 아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코자 한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더 증진하는 경우가 흔하다. 나는 공공의 선을 위해 거래를 하는 체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을 가져오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사실 상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일은 아니며, 그런 짓을 말라고 설득하는 것에 많은 말이 필요 없다...” Adam Smith(1776/1981), *Wealth of Nations*, (Glasgow edition, book 4, chap. 2, para. 9). p. 456(김행범 역).

향된 듯하다. 자유의 유토피아보다 더 강렬한 마력을 주는 좌파의 유토피아는 이념 전선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유리하다. 《노예의 길》 제2장(위대한 유토피아)은 자유 사회로 가는 싸움은 곧 지식인 공동체 안 “하이에크 vs. 하이데거의 싸움”임을 알려준다. 태생적인 불리함을 먼저 인정하면서도 자유주의 교사들로서는 청년 세대에 그릇된 낭만을 적절히 절제하라거나, 몸에 좋은 음식이란 으레 맛있다거나, 모든 에로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플라톤의 인기 없는 말을 주절이며 사이비종파 포교사들처럼 끈질기게 젊은 세대를 설득하면서 시간이 그들을 성숙시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언뜻 무력해 보이는 이 처방이 전적으로 무력한 것은 아니며, 청년 시절 한때 좌파에 끌려들었다 후일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아온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 참고문헌

- 존 밀턴, 『실낙원』 박문재(역), (2019/2023), CH 북스.
- Buchanan, James M.(2000), The Soul of Classical Liberalism, *The Independent Review*, 5(1): 111-119.
- Caldwell, Bruce(2007), The Collected Works of Friedrich A. Hayek, (vol. 2), *The Road to Serfdom: Text and Documents, The Definitive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rrida, Jacques(2006), *Specters of Marx: The State of the Debt, the Work of Mourning and the New International* (New York: Routledge, 2006)
- Finer, Herman(1945), *Road to Reaction*, 정환용(역), 『반동의 길』, (2010,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Hayek, Friedreich A.(1944), 김이석(역), 『노예의 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2006, 나남출판).
- Hayek, Friedreich A.(1944), 김이석(역), 『노예의 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2023, 자유기업원).
-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35(4): 519-530.
- (1949), The Intellectuals and Social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6(3). article 7: 417-433.
- (1952),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Studies on the Abuse of Reason*, Liberty Fund.
- Hölderlin, Johann Christian Friedrich(1897, 1899), Hyperion; oder, Der Eremit in Griechenland- I, II, 홍경호(역), 『히페리온』, (2007, 범우사).
- Kim, Haeng-Bum(2021), Social Justice: Cognition on Libertarian Perspective, *Journal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15(1): 107-144.
- Lilla, Mark(2001), *The Reckless Mind: Intellectuals in Politics*, 서유경(역), 『분별없는

열정』, (2018, 필로소피).

Yadav, Vikash(2023), *Liberalism's Last Man: Hayek in the Age of Political Capital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제1장, 제2장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

## 1. 들어가는 말

하이에크 「노예의 길」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80년 전에 출판되었지만 그 내용 대부분이 현재에 있어서도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발제문은 그렇게 수월하게 읽히지만은 않은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참조 자료(references)를 활용한 발제자의 설명과 해석은 원전의 격을 한층 높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해 하이에크 「노예의 길」과 발제자의 발제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내지 오독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니 오류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발제자의 “하이에크의 대실수?”에 대하여

### ○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괴이한 논리’

“하이에크는 ‘한편으로는 자유방임주의가 자유주의의 이상이라 규정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그 이상을 고수하지 말라’는 괴이한 논리를 편 셈이다”라고 발제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거친 경험법칙들에 대한 집착, 특히 자유방임 원리에 대한 아둔한 고집”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하이에크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자유방임주의’ 자체가 아니라 “거친 경험법칙에 집착하고 있는 일부 자유주의자”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유주의자의 사회에 대한 태도는 마치 식물을 돌보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에 최적 조건을 창출하려면 식물의 구조와 기능방식에 대해 많이 알아

야 하듯이, 자유주의자도 사회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

“우리는 더 배워야 할 게 많고, 아직도 우리가 걸어온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략). 이러한 전진이 가능해지려면, 최대한 활용해야 할 힘들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전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비교적 분명했던 화폐제도의 정비, 독점의 방지 혹은 통제와 같은 많은 과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그 필요성이 덜 분명하지만 결코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더 많은 여타 분야의 과제들이 있었으며, 좋은 싫든 정부가 이 여타 분야에서 엄청난 권력을 지녔었다. 해결하려는 문제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언젠가는 이 힘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하이에크는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기 보다는 자유방임주의가 발전해야 할데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듯하다. 즉, 자유방임주의는 과거에 포로가 된 만고불변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발전(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19세기 경제정책의 원리들을 표현하려고 이용되는 조잡한 규칙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즉, 19세기 상황에서 나온 (자유방임주의의) 조잡한 규칙들을 현 시대에도 “과거에 집착”해서 “아둔하게 고집” 피워서는 안되고, “경쟁이 가능한 한 최대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체제를 의식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하이에크는 말하고 있다.

이는 경영학의 전략경영(Strategic Management)의 기본원리와 유사하다. 이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이념과 핵심 가치를 고수하되 (변하면 안되고), 전략, 추진 방법, 제도, 이슈 등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상황적합적으로 변화하는(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 역시 자유주의의 이념과 핵심가치는 고수하되, 동시에 시대변화, 이슈 등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요청된다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 자유주의자는 이를 위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이에크는 말했다.

사회주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유능하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회주의는 늘 유연하게 변신, 적응해 왔다.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개인주의적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자유사회주의, 민족사회주의, 개혁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윤리적 사회주의, 사회자유주의, 진보주의, 환경사회주의 등.

○ “보편적 기본소득제(UBI)” 이슈

하이에크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보장 정책을 ‘제한적 보장(the limited security)’과 ‘절대적 보장(the absolute security)’으로 명명하며, 제한적 보장만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제한적 보장의 대립 항으로 제시한 ‘절대적 보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은 없다.

하이에크의 제한적 보장과 절대적 보장

	제한적 보장	절대적 보장
보장 정책	최저생계비 지원 등 불우한 소수에 대한 서비스 재난에 대한 완화, 대비 등	특정 집단·직업의 소득 보장 시장 결과의 수정·재분배 정책
적용 대상	법적 보편성을 가진 대상	입법에 의해 특정 집단에게 적용
정책 시행 범위	시장 외부, 보충적 제도	시장 질서에 직접 영향
등장 시기	자유주의 전통 오랜 기간 국가/자선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1930년대 전후 새로운 요구로 등장
예측 결과	자유 보장에 보충적 작용	자유를 훼손

제한적 보장은 합법적인 요구 대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일부 집단에 대한 정책이나 특권이 아닌 합법적인 대상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하이에크가 염두에 두었던 지원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여겼다. 그는 이러한 보장이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성격의 재난을 대비하거나 그 결과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장 질서 등의 자생적 질서에 보충적 제도로서 국가에 의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이에크의 제한된 보장은 한국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이에크의 제한된 보장이 내용으로 하는 보장정책, 보장 대상, 보장 수준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한국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제한된 보장’을 ‘보편적 기본소득제’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보편적 기본소득제 주장의 근거로 끌어온다면 이는 아전인수, 건강부회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이에크의 제한된 보장은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큰 차이가 있다. 하이에크는 제한된 보장으로 국민의 1/3이 정부에게 지원받는다거나 그 수준이 국민평균소득의 30%에 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 하이에크의 제한된 보장은 생존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그저 의식주가 가능한 최저생계비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에 관한 것이지 욕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제한적 보장이 비록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의 재분배를 함축하고,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제한적 보장이 내포하고 있는 관용(tolerance)과 약자에 대한 강자의 보호는 자유주의/개인주의의 기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이에크는 이를 “자유주의 전통”이라고 했다.

하이에크는 또한 제한적 보장이 자유의 유지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단지 위험의 너무 크지 않은 동안에만 자유 속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보존하려면 일정한 정도의 보장은 필요하다.”

“자유는 오직 가격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심한 물질적 희생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하이에크의 제한된 보장이 자유의 핵심 내용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보장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의 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3.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에서 ‘토크빌의 민주주의 vs 사회주의’ 인용에 대하여

오이켄(W. Eucken)은 하이에크의 토크빌 인용(노예의 길 제2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그 이유로 다음을 들고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지 않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도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전형을 낳을 수 있고,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부와 이익집단간 야합으로 국가가 이익집단들의 장난감 공으로 전락했다. 나치 집권도 민주주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역할은 크지 않다.

하이에크 스스로도 민주주의에 대해 유보적 내지 비판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수단이다. 즉, 민주주의는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이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거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체제 아래에서보다도 독재의 지배 아래에서 문화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가 더 컸던 적도 자주 있었다는 사실이다. 매우 동질적이면서도 교조주의적인 다수의 지배를 받는 민주정부가 오히려 최악의 독재만큼이나 압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김이석 역, 2018: 117-118; 김이석 역, 2006: 121).

민주주의는 흔히 다수의 지배로 정의된다.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는 ‘인민의 지배’이지만 결정을 요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전 인민이 동일한 의견을 가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현실적 형태는 다수의 지배로 나타나게 된다. 다수의 지배는 수적 다수에게 유리한 특권적 지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다수주의의 명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혹은 여론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다수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는 다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라면 민주주의는 일인 혹은 소수의 지배와 다를 바 없는 전제의 한 형태이다.

-공화주의/입헌주의도 헌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다수결 원칙’에 있는 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곤란하다.

-민주주의를 정치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쟁적 절차로서 이해하고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이론’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다수결 원리가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 승인되고 나면 다수의 의견과 감정이 모든 개인을 지배하게 되는 사회적 전제가 등장하게 된다.

#### 4. 험난한 자유의 길

한국에서 노예의 길은 탄탄대로이고, 자유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자유의 길에는 곳곳에 높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 장애물 몇 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권위주의 문화

-우리 국민은 장기간의 가부장적 유교문화, 권위주의 등에 길들여져 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까지 정부가 간섭해서 해결해 주기 바라는 국가 의존 심리, 노예 심리가 강하다.

-우리 국민은 자유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권위주의에서 바로 민주주의를 맞이했다.

○ 강한 평등주의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추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많은 국민들은 케인즈 이론에 바탕을 둔 수정자본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는 해결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 시장 질서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평등 의식이 강한 나라는 드물다.

○ 집단주의

-강한 연고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탈근대적 자유주의 단계가 아닌 근대적 계급적 민족적 가치추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는 거대사회가 아니라 소규모사회(원시사회, 부족사회)의 성격을 가진다.

○ 사회주의적 정책의 지배

-정부 및 여야정당의 정책은 경제적 가치보다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 ESG, 환경,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노동자 경영참여, 기본소득 등)

○ 빈번한 특별법 입법

-특정 사안 내지 특정 이익집단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문제점을 노정하는 특별법 입법이 빈번하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질서는 일반법을 통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모두가 법앞에 평등을 갖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세워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고, 특별법 입법을 억제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5. 「노예의 길」 김이석(2018. 자유기업원) 번역 관련

개인적으로 번역의 어려움을 늘 절감하고 있다. 번역문이 원문을 일부 부정확하게 전

달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장이 몇 개 보인다.

○ 65쪽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번역문]

이스트만이 “스탈린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스탈린 계획의 일부로 스탈린이 의존했던 국유화와 집단화라는 비록 예측하지 못했지만 불가피했던 방식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면, 그의 결론은 분명히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

[원문]

"When we find the same author recognizing that Stalinism is socialism, in the sense of being an inevitable although unforeseen political accomplishment of nationalization and collectivization which he had relied upon as part of his plan for erecting a classless society, his conclusion clearly achieves wider significance."

[수정 의견]

문장이 복잡하지만 수식구를 제하고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이스트만이 스탈린주의가 사회주의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결론은 분명히 더 큰 의미를 갖는다'이며 '비록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스탈린이 의존했던 국유화와 집단화라는 예측하지 못한 정치적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의미에서'라는 수식구가 삽입된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방식이 성취되었다'라는 번역은 부정확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번역된 문장은 '불가피한 방식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다'라는 뉘앙스를 주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수정 번역안은 아래와 같다.

"이스트만이 스탈린주의는 비록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스탈린이 의존했던 국유화와 집단화라는 예측하지 못한 정치적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의미에서 사회주의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결론은 분명히 더 큰 의미를 갖는다."

○ 67쪽 둘째 문단 6~8줄

[번역문]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환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도달한 단계이다. 그리고 공산주

의가 환상이라는 것은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서만큼이나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도 밝혀졌다.“

[원문]

"Fascism is the stage reached after communism has proved an illusion, and it has proved as much an illusion in Stalinist Russia as in pre-Hitler Germany“

[수정 의견]

”파시즘이 공산주의 후에 도달한 단계라는 것은 환상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것은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서만큼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도 환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공산주의가 환상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시즘이 공산주의 후에 도달한 단계라는 것이 환상이라고 밝혀졌다는 의미인 것 같다.

###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발제: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철학)

사회주의와 국가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의 한 종류다. 집단주의와 사회주의는 중앙 집중적 계획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집단주의와 대조되는 것이 개인주의다.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상위 개념이다. 하이에크는 중앙집중적 계획을 맹렬히 공격하지만, 국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독단적인 자유주의와 구별된다. 하이에크는 ‘경쟁을 위한 계획’은 인정한다.

하이에크의 사상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가 사용하는 개념들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대부분의 사상가가 그러하듯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을 구분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사용하는 여러 개념 가운데 범주의 넓고 좁음에 따라 설정한 개념의 서열이다. 하이에크가 일관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주의이지만, 사회주의가 가장 큰 범주는 아니다. 하이에크는 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대비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대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하위 개념에 속한다. 하이에크가 사용하는 가장 넓은 개념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다. 다음 그림1)은 하이에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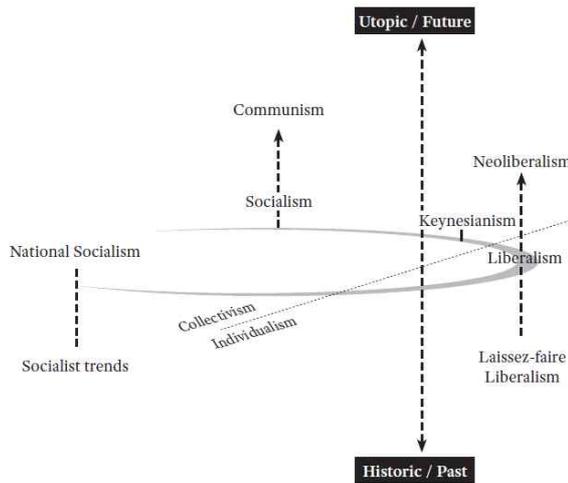


FIGURE 1.1. Hayek's curved political spectrum.

하이에크가 옹호하는 이념인 자유주의와 그가 비판하는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범주가 더 넓은 개념에 포섭되어 있다.

1) Vikash Yadav(2023), *Liberalism's Last Man: Hayek in the Age of Political Capital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35.

우선 하이에크의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부터 살펴보자.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그러나 그 구분이 명확한 것만은 아니어서 여전히 모호한 점을 남기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는 어떤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 더 큰 평등과 안전이라는 이상을 의미하거나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둘째, 사회주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는 사기업 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대신에 그 자리에 계획 당국이 들어서는 '계획경제'의 창설을 뜻한다. 사회주의자로 호명되는 사람들은 이상만 소중히 여기고,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셋째, 다음으로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을 사회주의자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지만 사회주의자가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소중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관련이 있다. 수단을 부인하는 사람도 목적은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계획의 주요 도구인 '계획경제'는 많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소득분배를 현재의 사회정의 사상에 일치하게 하려면 국가는 경제활동을 지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을 위한 생산'이 '이윤을 위한 생산'을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계획'을 지지한다. 평등주의적 분배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과 일치하는 분배를 위해서도 경제계획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은 사회주의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과 사회주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이 사회주의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유를 위한 계획'도 존재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집단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가 공유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 사회주의자들이 그 집단주의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사회주의를 집단주의의 한 종류로 여기는 것이 더 좋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집단주의에 적용되는 것은 사회주의에도 적용된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점은 법을 사용하여 성취하려고 했던 목표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집단주의는 계획주의다. 하이에크는 "집단주의를 계획의 목적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계획경제'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해도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형태의 분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집단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다소 확정적이 된다고 본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의 사상은 그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호소

력을 갖기에 중앙집권적 계획의 귀결을 논하기 전에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획이 대중의 명성을 얻은 이유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숙명론자가 아닌 한, 우리는 모두 계획자이고 모든 정치적 행위는 계획 행위이다.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자신의 일을 어떻게 계획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을 반대하기 어렵다.

현대 계획자들은 분배를 위한 계획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목적 달성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합리적, 항구적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자유주의적 계획**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계획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자원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를 ‘의식적으로 지시하는’ 단일 계획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을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중앙의 지시와 통제에 의한 계획이라는 의미로 계획을 사용한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의 명령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합리적 경쟁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의 주장은 인간 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경쟁의 힘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독단적 방임주의의 태도가 아니다. 경쟁이 개별적 노력의 좋은 길잡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주의의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을 필요로 하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의 법 규칙들이 중대한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들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경쟁이 가장 효율적일 뿐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을 우월한 방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의식적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 특정한 직업이 그 직업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 요소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망이 있는지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각자에게 부과한다.

경쟁을 사회적 조직화의 원칙으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떤 강제는 배제하면서도 경쟁의 작동을 돕는 유형의 강제는 허용해야 한다.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거래와 시장 진입의 자유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이에크는 특정한 독성물질 사용 금지, 독성물질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예방 조치의 의무화, 근로시간 제한, 위생시설의 의무화, 경쟁의 보존과 양립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경쟁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경쟁이 작동하려면 화폐, 시장, 정보망과 같은 특정 제도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대기업에 의해 제공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쟁의 작동 여부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법적 시스템 즉 경쟁을 유지하고 동시에 경쟁이 가능한 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의 존재에 달려 있다. 법 체제

가 재산권 사용과 계약의 자유를 잘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의 사용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고 그 사용이 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기나 기만의 방지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도로, 공장의 매연, 소음, 산림 벌채, 특정한 경작 방법은 정부의 몫이다. 하이에크는 국가의 활동이 요구되는 분야를 인정한다.

자유주의자와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은 경쟁을 혐오한다. 좌파와 우파 사회주의자들을 단결시키는 것은 경쟁에 대한 공통된 혐오감과 이를 지시경제로 대체시켜려는 공통된 소망이다. 계획과 경쟁의 조합도 의도와 달리 사회주의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조합주의적 조직화 즉 산업의 ‘협동조합’화는 경쟁을 다소 억제하기는 하지만 계획의 주체를 개별산업의 독립된 독점체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한다. 소비자들은 협동조합화가 가장 잘 조직화된 산업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결합독점행위의 횡포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계획주의자의 경쟁에 대한 반대는 계획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쁜 상황을 초래한다.

산업독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한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는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아직도 ‘원자적’ 경쟁과 중앙명령 사이에 어떤 중도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경쟁이라는 극단적 탈중앙화도, 하나의 계획이라는 완전한 중앙화도 아닌, 두 방법의 신중한 배합이어야 한다는 말은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이런 단순한 생각은 위험한 길잡이일 뿐이다. 때로는 경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계획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경쟁은 생산에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 원칙을 혼합한다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게 한다. 둘 가운데 한 가지 시스템을 일관되게 적용하였을 때에 비해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과 경쟁은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으며, ‘경쟁을 막는 계획’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혼합될 수 없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경쟁을 막는 계획, 다시 말해 경쟁을 대체하려는 계획뿐이다.

### 사회주의의 여러 형태<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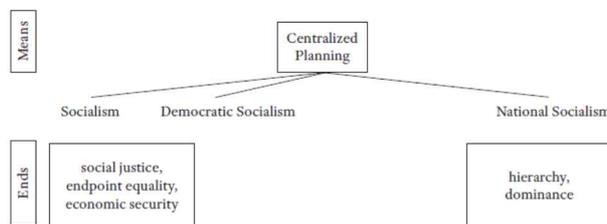


FIGURE 2.1. "Collectivism."

2) 같은 책, p.54.

참고3) : 국가와 사회가 만든 좁은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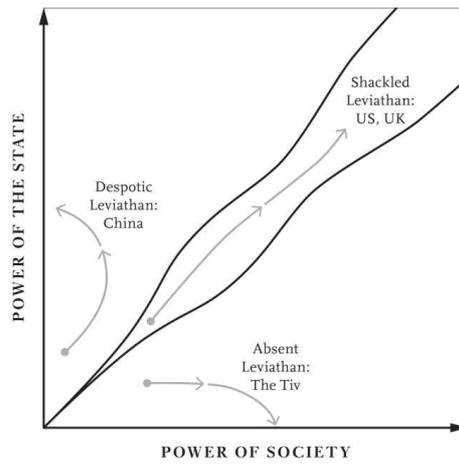


Figure 1. The Evolution of Despotic, Shackled, and Absent Leviathans

3)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좁은 회랑』 장경덕 옮김, 시공사, 2020, 132쪽.

## 4장 계획의 ‘불가피성’

발제: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 철학)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중앙집중적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기술 전문가들과 국가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 도입을 강제하려는 입장은 옳지 않다.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의 발전이 급진전된다고 해서 중앙계획의 근원적인 한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유토피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정’이고, 이러한 조정은 자발적 질서, 시장 질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급진적인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이다.

계획자들은 우리가 통제하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경쟁을 계획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되돌릴 수 없는 기술 변화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분야에서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독점기업이 스스로 생산을 통제하거나 정부의 지시를 통해 통제해야 하는데, 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기술의 발전이 ‘산업의 집중’을 초래한다는 마르크스의 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주장은 확립된 ‘객관적 사실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선전과 여론의 결과다.

지난 50년 동안 독점이 급성장하고, 경쟁이 지배하는 분야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기술 진보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대개의 국가에서 추구된 정책들의 결과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대량 생산은 그 효율성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산업 분야에서 하나 또는 소수의 거대기업만 남게 된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의 높은 효율성이 경쟁을 사라지게 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 대규모 생산의 이점이 필연적으로 독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은 담합에 의한 합의를 통해 형성되고 공공정책들에 의해 산출되었다. 독점은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도움에서 나왔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입장이다.

경쟁의 쇠퇴와 독점의 성장이 기술 진보의 결과라면 가장 진보된 경제체제에서 독점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신생공업국에서 발생했다. 1878년 이후 독일에서는 독일 정부의 의도적 정책에 의해 거대 독점기업이 발생했다. 독일에서 경쟁의 억압은 ‘계획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 정책의 결과였다. 경쟁체제는 ‘독점자본주의’로 진

화한다는 생각은 독일의 사회주의 이론가들 특히 쾰바르트의 영향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이에 수반하는 경제정책이 실시된 이후 독점이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기술 진보가 계획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현대 기술 발전이 초래한 산업문명의 복잡성은 중앙계획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제 전체의 일관된 모습을 완전히 알 수 없는 혼돈 상황에 봉착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삶이 해체되지 않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중앙 당국이 사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경쟁의 작동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쟁은 단순한 조건뿐만 아니라 복잡한 조건에서도 잘 작동한다. 더욱 복잡해지는 노동 분업 때문에 경쟁 없이는 경제활동이 제대로 조정될 수 없다. 고려해야 할 요인이 너무 많아 이 요인에 대한 전체적 모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의사결정의 분권화도 불가피해진다.

분권화에서는 '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유롭게 활동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계획들 사이에 상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은 '의식적 통제'로 해결될 수 없다. 정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앙통제기구는 수요와 공급의 조건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변화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도 없고, 적시에 수집하고 전파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 행동과 연관된 모든 효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 값은 모든 개별 결정의 결과인 동시에 향후 의사결정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자동기록장치'다. 이 자동기록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쟁 아래서의 가격 시스템이다.

중앙집권적 계획은 가격 시스템을 대신할 수 없다.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자동적 조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계획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분업의 발전이 현대 문명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화되었다. 분업은 의식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복잡성이 증대하면 필요한 것은 중앙집권적 계획이 아니라 자율적 조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점을 도입하지 않으면, 많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우리의 원망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진정으로 이전의 기술보다 낫다면, 모든 경쟁을 이겨낼 수 있다. 중앙 지시가 초래할 수 있는 혜택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실한 자유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계획을 향한 운동은 외부의 필연성이 아니라 의식적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기술전문가들은 계획주의의 선봉에 서는가. 전문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술의 발전을 인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빠른 시간 안에 실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은 무한히 많다. 그것을 한정된 시간에 모두 성취할 수는 없다. 하나를 얻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잃은 결과다. 좁은 관점에 매몰된 전문가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계획사회에서는 계획 덕분에 국민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할 수도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멋진 자동차 도로들은 계획의 결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의 잘못된 배분의 결과다. 전쟁 상황이 아닌 평화 시대에는 독일의 자동차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영국의 일반도로 교통량보다 적다. 따라서 독일의 고속도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계획사회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목적들이 더 많은 관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시골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존해야 하고,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위해 산업화가 묻힌 더러운 때를 없애야 하고, 목가적이지만 비위생적인 오래된 오두막을 모두 철거해야 하고, 산과 마을을 파괴하면서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면 숨어 있던 갈등이 표출될 뿐이다.

특정 목적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은 계획에 열광한다. 이런 유토피아적 계획 광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용인하지 못하여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계획을 유도하는 강력한 추진력은 꿈이 좌절된 전문가들의 분노이다.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계획의 피해자는 일반인이다. 계획 사회에서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자신이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는 ‘전지한 독재자’ 없이도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원한다. 그것은 개인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 제재는 비인칭적(impersonal)<sup>4)</sup>이고,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unintelligible) 없다. 이런 제재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노할 것이다.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

#### 참고: 포퍼의 유토피아적 사회공학 비판

---

4) impersonal은 번역하기 까다로운 개념이다. ‘비인격적’, ‘비인적’, ‘비인간적’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 제3장, 제4장에 대한 토론문

### - 《노예의 길》과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

토론자(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 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20세기 인류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누렸지만, 성장이 정체되거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자 그것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세력들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940년대 이 생각들이 ‘진보된 형태’<sup>5)</sup>로 받아들여졌다.

우리들은 문명의 형태가 복잡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단언을 한 최초의 사람들이다. - 무솔리니<sup>6)</sup>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 서문에서 “아마추어와 가짜 만병통치약을 파는 돌팔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험수위가 너무 높아져 여론에 경고음을 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sup>7)</sup>고 집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의 근본원인을 경쟁 혐오에서 찾았다. “좌파 및 우파 사회주의자들은 실제로 단결시키는 것은 경쟁에 대한 공통된 혐오감과 이를 지시경제로 대체시키려는 공통된 소망이다.”<sup>8)</sup> 그러나 어느 집단이든 사회주의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전지한 독재자’<sup>9)</sup>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의 한 종류이기에, 집단주의에 대한 모든 진실은 사회주의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이다.”<sup>10)</sup>

“사회주의가 바로 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시 한 번 그들의 삶을 군대식 병

5) 《노예의 길》(2024), p.116

6) p.93

7) p.31

8) p.105

9) p.129

10)p.95

영화로 이끌고 갔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sup>11)</sup>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 스탈린의 공산주의 등의 전체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중앙 집중의 계획경제와 명령경제 사회를 만든 바 있다.

## 4장 계획의 ‘불가피성’?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독점자본주의’로 진화한다는 생각이 확산<sup>12)</sup>되었고, 사회주의자들이 국가가 이를 계획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계획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누구나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와 같은 상태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로 “대개의 사람들이 아직도 ‘원자적’ 경쟁과 중앙명령 사이에 어떤 중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장담하는 계획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획’이라는 약은 대량으로 복용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소량으로 복용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은 아니다.”<sup>13)</sup>

“중앙지시라는 얼핏 보기에는 더 명백한 방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툴고, 원시적이며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복잡성이 증대하면, 중앙집권계획이 더 필요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의식적 통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방식이 더 절실해진다.”<sup>14)</sup>

“각자의 계획들 사이에서 상호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통제기구가 알 수 없거나 혹은 충분히 빠르게 수집하고 전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별 행동들의 연관된 모든 효과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치가 모든 개별결정들의 결과인 동시에 향후 의사결정에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자동기록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 경쟁 아래서 가격시스템이 이런 기록 장치의 역할을 하며, 다른 어떤 시스템도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sup>15)</sup>

### 사회주의의 결말: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메인 메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다 읽었다면, 디저트로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책을 읽어보자. 이 책의 원제는 ‘XYZ’s of Socialism’이다.

---

11) p.96

12) p.115

13) p.107

14) p.121

15)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p.119-120.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ABC에 속지 말고,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참혹한 결과를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와 비유가 많아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대한 해설서로 읽기 용이하다.

‘1장 사회주의는 무엇인가?’에서는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 3장에서 경고한 집단주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눈송이와 눈보라로 비유하는데, “집단주의자는 인류를 눈보라로 보는데, 개인주의자들은 그 속의 눈송이 하나하나가 독특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sup>16)</sup>는 것이다. “집단주의자였던 카를 마르크스는 사람들을 덩어리로 취급했고, 마더 테레사는 사람들을 개인으로 대우했다.”는 점도 상기시켜 준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로의 경향성을 경쟁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표현했는데, ‘2장 왜 사회주의에 끌리는가?’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정반대의 길, 노예로 향하는 혼잡한 길로 앞서가지 못해 안달일까?”에 대한 해답으로 ‘시기심’을 꼽는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누가 얼마나 더 누리고 있느냐,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일차원적인 사고를 파고 드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시기심과 탐욕의 감정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sup>17)</sup>

《노예의 길》 4장에서 언급한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에 대해서도 마치 “미국인들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까?”<sup>18)</sup>에 대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또 “민간 기업가가 경쟁적인 가격 네트워크가 있는 시장 질서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중앙경제 계획자만큼이나 ‘계기판만 보고 비행하는’ 무모한 행동”<sup>19)</sup>이라고 언급한다.

“사람들을 위해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개인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로저 J. 윌리엄스<sup>20)</sup>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에서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특징도 비교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간 본성의 원시적으로, 창의적이지 않으며, 나태하고, 의존적이며, 비도덕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파괴적인 면”, 즉, 인간의 어두운 면에 호소하고 있는 반면, 하이에크가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희망을 주는, 재생시키는, 동기를 부여하는, 창의적이며 흥미로운 철학이다. 이는 주체성, 책임감, 개인 주도, 재산권의

---

16) p.33  
17) p.5  
18) p.33  
19) p.49  
20) p.33

존중, 자발적인 협동과 같은 인간 본성의 고상한 특질에 호소하고 의존한다.”<sup>21)</sup>고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현대 사회주의의 다섯 가지 얼굴’에 대해 소개한다. 입법 만능주의, ‘눈먼 나랏돈’의 환상, 책임전가 병, ‘다 아는 척’ 병폐, 질투 강박증이 그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 책에서 언급한 현대 사회주의의 다섯 가지 모습이 그대로 확인된다. 이것들은 사회주의라는 것을 감춘 채 “상생,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포용적 성장과 같은 화려한 미사여구들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그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빅토르 위고가 말한 것처럼 “쳐들어오는 적군에게는 저항한다. 그러나 스며 들어오는 사상에는 저항하지 않는다.”<sup>22)</sup> 2024년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예의 길》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

21) p.110

22) p.106

##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발제: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 경제학)

하이에크는 한 장(chapter)의 내용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글로서 접두문(接頭文, epigraph=제사題詞=명구名句)을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5장 계획과 민주주의'의 접두문 역시도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5장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인용하고 있다.

“사적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자본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려는 정치가 있다면, 가장 쓸데 없는 데 정력을 쏟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평의회나 상원에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권위를 자신이 잘 행사할 줄 안다고 환상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수중에 넣게 될 때만큼 위험해지는 경우는 없다.” 즉, 하이에크는 국가의 계획, 단일의 경제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불가능하며,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독재로 나아가게 된다고 본다. 이 경우, 주권이 국민 혹은 의회에 있으며, 이것이 독재 전체주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에서의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결국 국민투표-독재체제로 향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가치가 아닌 수단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며, 추구하고 지켜야 하는 궁극적 가치는 자유이다. 권력의 '원천'보다는 권력의 '제한'이 중요하며, 그것은 “권력의 사용이 확고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어지는 6장 '법의 지배'로 연결되게 된다.

### [계획은 집단주의 시스템의 공통적 특징]

먼저, 하이에크는 계획은 집단주의 시스템의 공통적 특징이며, 이는 집단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단일의 계획이란 것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집단주의 시스템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집단주의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은 물론 개입주의도 포함된다.<sup>1)</sup>

1) 하이에크는 개입주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글에서 “일단...공공부문이 전체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국가 행동의 영향은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개입주의도 집단주의 시스템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 [계획이 불가능한 이유]

단일의 경제계획이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상 언급되는 ‘공동선’ 혹은 ‘일반적 복지’라는 표현은 너무나 애매해서 특정 행동방식을 결정할 만큼 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한편,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단지 목적들의 위계체계, 즉...‘가치들의 포괄적 체계’로서만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계체계 내에서 각각의 목적 내지 가치들이 서열을 갖게 되는데, 이는 이것을 판정하는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런데, “핵심적 사실은 그런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무엇이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그 어떤 답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하이에크는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자신의 유명한 ‘지식 및 정보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설명한다. 즉,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로,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척도 속에 사회 전체의 필요들 가운데 일부분 이상을 포함할 수 없으며, 또 엄격하게 말해서 가치의 척도들은 개인 각자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들마다 다르고 또 상충될 때가 많은 가치의 단편적 척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개인주의 철학의 궁극적 기초이며, 이로부터 개인주의의 믿음, 즉 “개인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재판관으로서 인식하는 것, 즉 가능한 한 자신의 견해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야 한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목적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과 독재로의 경향]

물론, 하이에크도 개인주의 사회에도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인 ‘사회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주의는 그러한 공동의 행동을 개인들의 견해가 일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재판관”인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 경우에 “이른바 ‘사회적 목적’이란 단지 많은 개인들의 동일한 목적에 불과하다.” 개인들 간 공동행동을 하기로 합의가 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직접적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의 직접적 통제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단일의 계획, ‘사회적 목적’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가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의회에서 ‘사회적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던 ‘지식과 정보의 문제’ 및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의 부재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논란과 다툼만이 무성하게 된다. 즉, “경제활동의 계획에서는 화해되어야 할 이해관계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민주적 의회에서 진정

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결국 의회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무능하고 비능률적인 ‘말만 무성한 곳’으로 간주”되고, “효율적 계획이 이뤄지려면....전문가들, 영구적 관료들, 혹은 독립적 자율기구들의 손에 계획을 맡겨야 한다는 확신이 점차 커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가지만, 이들이라고 해서 ‘지식과 정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이 부과하는 ‘사회적 목적’이란 합의된 목적이 아니라 관료 및 전문가들의 개인적 선호체계를 부과하고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으로는 민주적 의회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합의는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혹은 어떤 개인이 그 자신의 책임 아래 행동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점 더 강력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지지를 얻게 되는 경제 독재자가 통치하는 집단주의 체제로 가게 된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에 경제 독재자를 세우려는 운동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히틀러는 민주주의를 파괴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지 민주주의의 쇠락을 이용하여, 결정적 순간에 비록 그를 혐오했지만 오직 히틀러만이 일을 실행해 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보았던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 [민주적 통제의 환상]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통상 민주주의가 최종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독재의 등장 같은 사태가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요한 구별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국회가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거나, 국회가 먼저 그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회가 그 집행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즉 의회에서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불가능한 임무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경우로, 의회에서 그 목적들에 대한 진정한 합의에 처음부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실제로 권력을 어떤 사람들이 가질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으로 축약될 것이다. 전체 체제는 정부의 수반이 가끔씩 국민투표로 자신의 지위에 대한 확증을 받는 국민투표-독재 체제로 향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독재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충실한 도구가 된다. 하이에크는 이것을 민주주의가 “집단주의 신조에 의해....지배당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파괴”한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비록 민주적인 형태를 띠겠지만, “중앙집권기관에서 경제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어떤 독재정치 못지않게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권력의 제한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유 사회에서도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자유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합의가 존재하는 분야들로만 국가의 통제를 한정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하이에크는 “다수의 지배를 받는 민주 정부가 오히려 최악의 독재만큼이나 압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의 실현에 봉사하는 수단일 뿐이며, 그것이 실현에 봉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 수호에 중요한 것은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다. 자유 수호에 중요한 것은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권력의 ‘제한’이다. 그리고, 권력의 사용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사용이 확고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 6장에서 다루게 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 사회에서 국가자원의 전체적 통제에 대한 합의인 경제계획은 수립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수립되고 집행된다면, 그것은 곧 독재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합의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이외에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대규모 ‘경제개발계획’이나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이어져 행해지고 있는 산업정책, 각종 육성정책,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 등이 만연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차별과 특혜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로서,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특히나, 민주주의가 수단이 아니라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신봉하는 우리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민주적 결정이라는 미명하에 최악의 독재만큼이나 압제적일 수 있다는 하이에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5장을 읽으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 국방, 법과 질서의 유지, 공공재와 사회기반시설의 제공 등을 국가가 제공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물론, 애덤 스미스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이에크의 경우엔 그런 대략적인 언급도 없고, 내용상 자발적 합의가 되는 분야에서는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게다가 목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고 함으로써 자칫 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하이에크라면, 국가 역할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언급했을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지를 했을까?

마지막으로, 물론 하이에크는 이 장에서 계획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독재로의 경향 및 자유 침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경제계획과 관련하여 ‘한강의 기적’과 같은 ‘성공’ 사례를 들어 계획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하이에크의 견해에 반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sup>2)</sup> 이 부분에 대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적으로 했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

2) 예를 들면, 장하준은 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심한 중국의 성장률이 훨씬 시장경제적인 미국보다 높다면서 개입주의 집단주의 시스템에 더 우월하다고 하고 있다.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pp. 94-107.

##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발제: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 철학)

6장에서 하이에크는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설명하고, 그로부터 법이 지배하는 정부와 그렇지 않고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자의적 정부를 대비시킨다.

즉, 그는 이 장의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법의 지배라고 알려진 위대한 원칙이 자유 사회에서 준수된다는 사실보다 더 확연하게 이 자유 사회의 조건과 자의적 정부 아래에 있는 사회의 조건을 구별해주는 것은 없다....법의 지배란 정부가 모든 행동에서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당국이 주어진 상황들 아래에서 자신의 강제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지식의 기초 위에서 자신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과 중앙 당국에 의한 경제계획의 구분은 ‘법의 지배 대(對) 자의적 정부’라는 보다 일반적 구분의 하나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곧이어,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에서 의미하는 ‘법’의 중요한 성격들, 법다운 법이 갖춰야 할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의적 정부에는 그와 같은 ‘법’의 성격들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을 대비시킨다.

그 한 가지는 법의 탈목적성이다. “법의 지배 아래에서는, 정부는 가용자들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규칙들을 확정하는 것에 자신의 일을 한정하고, 이 자원들이 어떤 목적들에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들에게 남겨둔다.” 반면에, “자의적 정부에서는 정부가 특정 목적들에 생산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집단주의적 성격의 경제계획은 필연적으로 법의 탈목적성과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경제계획을 하는 계획 당국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결정들을 내리는 데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의 상충되는 이익을 서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특정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누구의 이익이 보다 중요한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법의 성격은 추상성 내지 일반성이다. 법의 지배에서 의미하는 법은 “사람들에게 미리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은 채, 국가가 어떤 유형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규칙을 하이에크는 형식적 법, 정의의 법이라 부르고, 구체적 내용을 갖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실질적 법과 구별한다.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이라는 용어이다. 언뜻 듣기에 ‘법다운 법’을 의미하는 ‘형식적’ 법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법 같지도 않은 법’인 자의적인 성격의 ‘실질적’ 법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이에크도 스스로도 사용했던 ‘추상적’이라는 용어 또는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대립되는 용어로 ‘구체적’ 또는 ‘특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 용어의 아쉬움은 이후에 나오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하이에크가 중요하게 여기는 법다운 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법의 일관성이다. 그는 법의 일관성이 법이 갖추어야 할 다른 특성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한다.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예외없이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무엇이 이 규칙이냐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를 왼쪽으로 몰도록 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몰도록 할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설령 오른쪽으로 모는 것이 정당하고 왼쪽으로 모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몰도록 할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운전자 모두가 똑같은 쪽으로 모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규칙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 및 형식적 규칙이 주는 이점은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정부 및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개인들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의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셈이다.

6장에서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는 “**나치나 혹은 여타 집단주의 국가는 ‘도덕적’인 반면, 자유주의 국가는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주의 국가는 도덕적이지 않은 반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목적을 지시하는 나치 혹은 집단주의 국가는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다. 법의 지배에서 말하는 일반적 규칙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들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미리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입법자가 편파적이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그 효과가

미리 예견되고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은 입법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즉,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의 인격을 최대한 충분히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공리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정지하고, 하나의 ‘도덕적’ 제도가 된다.” 즉, 특정 목적을 정하고 지시하는 국가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고 특정 도덕을 강요하는 ‘도덕’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계획 및 자의적 정부는 신분사회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하는 점이다. 계획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필요들 사이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곧 “특정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할지,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신분(status)의 지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계획과 자의적 정부에 의한 신분제 사회로의 회귀를 막고 ‘당국에 의해 지정된 특정인들이 법적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법의 지배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어서,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오해나 왜곡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그 불평등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그 불평등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유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으로, 어찌 보면 자유 사회가 치를 수밖에 없는 일종의 ‘비용’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를 시정한다는 명분의 물질적 혹은 실질적 평등 내지 분배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법의 지배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밝힌다.

두 번째는 ‘특권’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혼돈에 대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특권이라는 용어를 재산권 획득 자체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과거처럼 귀족만이 토지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누구는 특정한 물건을 팔 수 있고 누구는 팔아서는 안 된다고 당국이 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이다. 하지만, 누구나 토지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고,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칙 아래에서 단지 일부의 사람들만이 토지 재산권을 실제로 획득하고 사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을 특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박탈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유 사회라면 국가는 간섭하지 않고 무위(無爲)해야 하며, 국가가 간섭하고 행동에 나서서 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행동하여야만 하며, 국가의 모든 행동은 어떤 것 혹은 다른 것을 간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행동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은 간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질문은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행동과 간섭을 개인이 “예측할 수 있느냐 여부이며, 개인이 자신의 계획을 형성하는 데 이 지식(국가의 예측된 행동에 대한 지식)을 하나의 주어진 여건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자의적 행동과 간섭이 아니라 법의 지배 하에서의 국가의 행동과 간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는 여러 규칙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은 현명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규칙들이 항구적 적용을 위해 만들어지고, 특정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용되지 않는 한, 자유의 원칙들과 충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하여 이른바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홍수와 자유에 대한 침해 및 법의 지배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주제는 하이에크의 다른 저서 『자유헌정론』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sup>3)</sup> 대중 주권과 대중 민주주의의 결과 법과 입법의 구분이 혼란스러워지고, “국가의 모든 행동이 입법에 의해 정당하게 권위를 인정받기만 한다면 법의 지배의 이상은 보존된다는 믿음에 의해” 무제한의 입법권, 무제한의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법의 지배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법의 지배는 “정부의 행위가 합법이나 불법이나, 아니면 무법(lawless)이나의 문제가 아니다....만약 법률이 중앙계획위원회나 당국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 그 위원회나 당국이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법의 지배는 아니다. 법의 지배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특정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행동에서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법의 지배는...입법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시사한다. 법의 지배는 입법의 범위를 법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일반적 규칙들로 제한하며, 특정한 사람들을 직접 목표로 둔 입법이나 혹은 누구든 그와 같은 차별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적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제한한다.” 법의 지배에 의해 입법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독재조차 합법적 제도로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실태를 보자. 특혜나 차별을 공공연히 하는 입법, 특수한 사례만을 다루는 각종의 특별법, 게다가 소급입법까지 문자 그대로 법도 아닌 법들이 양산되고 있고, 법의 지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쉬운 점은,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이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하이에크는 6장에서 국회

3) 하이에크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II』, 자유기업센터, 1996.

의 입법권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약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제약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무제한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는 다른 저서들, 말하자면 『자유헌정론』이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안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sup>4)</sup> 예를 들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로서의 법의 지배와 제한적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국가 헌법을 언급하고, 헌법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헌법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헌법주의가 제한된 정부, 법의 지배를 실제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현재 입법을 하는 의회 외에 별도로 특별 절차를 통해 상원(上院)을 구성하고, 여기서 입법의 내용이 법의 지배 원칙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별도의 특별한 선거 절차, 별도의 구성 원칙에 따라 구성한다고 하지만, 결국 대중 민주주의 하에서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이들의 행태가 현재 입법을 하는 의회의 행태와 다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를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

4) 하이에크 (민경국 외 역),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자유기업원, 2018.

## 제5장, 제6장에 대한 토론문

토론: 황인학 (국민대 겸임교수)

### 1. 들어가며

내가 하이에크 저서를 처음 접한 것은 1970년대 말이었다. 문고판 서적, 「예종의 길」이었다. 왜 그 책을 샀는지는 기억이 가뭇하다. 뭘가를 알고 책을 샀던 것은 아니다. 예종 위험의 회피 성향을 끔찍하게 자극하는 제목에 낚였을 수 있다. 당연히 읽다 말았다. 거대 담론에 내용도 쉽지 않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는 베블렌의 「유한계급론」, 갈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가 더 솔깃했다. 그리고 대학원과 군 복무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떠났다. 학교에서 생활비도 준다고 하니 공부를 핑계 삼아 미국에서 몇 년 살아보기도 좋다 싶었다. 노스(D. North) 수업에서 하이에크 논문,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AER, 1945)'을 읽어야 했다. 그 논문을 읽고 첫 소감은, '이게 뭐지?' 조금은 당혹스러웠다. AER 논문에서 흔히 보는 수학 또는 통계학 기반의 논리가 아니었다. '지식과 정보는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흩어져 있으며, 이들 지식과 정보는 중앙의 계획이 아니라 분권적 의사결정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동원, 활용될 수 있다'는 논문의 요지도 당연해서 '새삼 뭐가 중요하지?'하는 의문이 일었다. 내가 이미 자유주의 논리에 익숙해진 탓일까? 너무 오래전 논문이라 그런가? 진짜 이유는 내가 과문했고, 역사의 시대 전환기에 하이에크가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하이에크에 대해 과문은 면한 듯하다. 「한국하이에크학회」 소속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자리할 기회가 많아서 가능했다. 그러나 「노예의 길」은 나에게 여전히 古典이었다. 누구나 인용하고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독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그런 의미의 古典 말이다. 이번에 드디어 읽기를 마쳤다. 유난히 사납게 뜨겁고 길었던 올여름, 자유기업원에서 출판한 「노예의 길」, 대우학술총서의 「하이에크 연구」를 읽었다. 김행범 교수님이 「노예의 길」 출간 80주년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초청한 사건이 계기였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대학 시절부터 찢찢하게 남아 있던 미완의 과제를 끝냈다. 한편,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저자의 의도와 논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경제철학보다는 실증연구가 전문인 내 경우는 특히 그렇다. 반면에 이번 세션에서 발제하는 권혁철 소장님은 하이에크의 많은 저서와 이론에 해박하다. 발제문을 읽은 후에 비로소 하이에크 이론의 요지와 논점이

명료하게 이해되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공들여 얻은 지식을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공공재로 제공하신 권혁철 소장님께 감사드린다.

참고로 제 토론문은 갑론을박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이에크 이론은 이렇고 쟁점의 본질은 저렇다는 식의 교조적 논쟁을 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세상을 떠난 경제학자의 사상적 노예가 되어 투쟁할 의도나 역량이 내게는 전혀 없으며, 꿈도 꾸기 싫은 일이다. 토론에 관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경제학자의 제1 법칙이란 것이 있다: ‘한 명의 경제학자에게는 반드시 그와 대립적인 이론과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가 존재한다.’ 하이에크 對 케인즈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경제토론은 서로 다른 이론과 견해로 무장한 이들이 갑론을박 다투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오늘 세미나는 「노예의 길」 출간 80주년을 기념하여 하이에크를 재조명하고 재음미하는 자리다. 제 토론문은 그 연장선에 있다. 오늘 세미나를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이기적 동기에서 틀릴 수도 있는 제 나름의 주관적 관점과 해석을 담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 2. 시대적 배경

1930년대 미국에서는 대공황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뉴딜 정책으로 알려진 국가 개입주의가 대두, 확산하였다. 영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와중에 복지국가론이 대두하였다. 그 당시 LSE 학장이던 비버리지(William Beveridge) 교수가 이끄는 팀에서 ‘사회보험과 통합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보고서를 발간한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시스템으로 배웠고, 영국 노동당 각료가 ‘전쟁의 암흑시대에 천국에서 떨어진 만나(manna)’로 평가했던 그 「비버리지 보고서」이다. 그때 하이에크는 나치즘의 끔찍한 전체주의를 피해 영국으로 건너가 LSE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도 사회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분위기가 퍼지자, 이에 경악한 하이에크는 국가 개입(state administration) 확대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모를 작성하여 비버리지 교수에게 전한다. 이 메모가 잡지의 원고로, 또 저서로 발전했는데 그 책이 바로 「노예의 길(1944)」이다. 이 책은 20세기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에서 하이에크의 고언은 먹히지 않았다. 영국 노동당은 비버리지 보고서를 공약으로 수용했고, 1945년 7월에 실시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처칠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처칠이 이끈 보수당은 의석수 213석 대 393석으로 노동당에 참패했다.

## 3.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자유방임과 계획에 대한 반대는 다르다]

-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적” 국가 계획과 경제에 대한 정부 규제가 전체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경계한다.<sup>1)</sup> 하이에크에게 “계획은 집단주의 시스템의 공통적 특징이며, 여기의 집단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을 포함하며, 국가 개입주의도 포함한다.”<sup>2)</sup> 이처럼 계획을 집단주의와 자유주의를 가르는 시금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인지 일부에서는 하이에크를 ‘자유방임주의자’로 규정한다. 맞는 말인가?

·예를 들어 정운찬(1995)은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확립하고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시장질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 반면, 케인즈는 자유방임의 곤란함을 지적하고 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sup> 고 하면서 하이에크를 자유방임주의자’로 규정한다.

- 그러나 하이에크는 자유방임주의에 비판적일 뿐 아니라 계획에 대한 반대와 자유방임은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다:

·인용 ①: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그 어떤 조잡한 경험법칙, 그중에 무엇보다 자유방임주의 원리에 관한 우둔한 주장만큼 자유주의에 그만큼 해를 끼친 것은 없을 것이다(p.42~43).”<sup>4)</sup>

·인용 ②: “이러한 종류의 계획에 대한 반대와 독단적인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주의자의 주장은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경쟁의 힘을 가능한 한 최대의 이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며, 사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자는 주장은 아니다(68~69).”

- 이런 명시적 표현과 더불어 하이에크는 국가계획을 전부 반대한 게 아니라 계획의 원칙을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자유방임주의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

### [허용되는 계획의 범위에 대해]

- 계획에 대한 반대와 자유방임이 다르다면 하이에크가 허용하는 계획의 범위와 내용은 무엇인가? 사뭇 궁금한 질문이다. 발제문에서도 “아쉬운 점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다는 점이다”라며 궁금해한다. 아래에 인용한 내용 외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설명으로 무엇이 있는가?

- 하이에크는 의식주만큼은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건강과 근로 역량

---

1) Acemoglu and Robinson(2019, p.465) “Hayek wa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socialist: state planning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economy morphing into a type of totalitarianism.”

2) 권혁철 발제문 인용

3) 정운찬(1995), ‘하이에크와 케인즈’, 하이에크 연구서, p.246

4) 제1장 포기된 길, “Probably nothing has done so much harm to liberal cause at the wooden insistence of some liberals on certain rough rules of thumb, above all the principles of laissez faire.”

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의식주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sup>5)</sup> 그리고 「자유헌정론(1960)」에서는 국가계획의 일환인 경제정책을 부인하지 않는 대신에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박세일(1995) 교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① 법의 지배는 자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나 하나의 필요조건이다.<sup>7)</sup>

② 경제정책은 개인의 결정에 유리한 프레임을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③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다음 두 원칙을 지켜야 한다.

i 공공재 공급의 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되 관리·운영은 가급적 민간에 위임할 것

ii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할 것

④ 정부 규제는 일반규칙으로서 보편성·무차별성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

- 또 하나의 관점: 하이에크의 계획에 관한 논리는 신제도경제학파(NIE)의 제도중시 이론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 노스, 아세모글루 등 NIE 학자들은 제도를 장기 성장의 근본 요인으로 본다. 여기서 제도는 자생적 질서는 물론이고, 정부의 계획에 관한 법령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아세모글루는 그의 대표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성장의 필요조건으로 ‘포용적 경제제도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를 강조한다. 내 소견에 이 포용적 제도는 하이에크가 허용하는 ‘계획’이 갖추어야 하는 원칙과 흡사하다. 그러나 NIE와 하이에크는 국가권력의 집중에 대해 입장이 다른 듯하다. NIE에서는 제도의 보편성, 일관성 등을 이유로 하이에크와 달리 중앙집권 정부를 선호한다. 참고로 「총·균·쇠(2003)」에서 다이아몬드는 경쟁과 혁신의 관점에서 ‘적정 분열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 [계획이 불가능한 이유 + 목적에 대한 합의 어려움과 독재로의 경향]

- 공동선 또는 사회후생 극대화 등의 주장은 멋진 레토릭이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완전무결한 윤리 규범’이 존재할 수 없고, 개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달라 민주주의에서는 사회 공동의 목적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동의 목적과 계획이 수립·집행되면, 그것은 리바이어던/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한다.

- 하이에크의 이 논리는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의 내용과 흡사해서 흥미롭다.<sup>8)</sup> (나만 그런가?)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란 ‘합리적이면서 모든 사람의 선호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의 바람직한 선호체계는 합리성(완비성과 이행성), 무관한 선택지로부터의 독립

5) “there can be no doubt that some minimum of food, shelter, and clothing, sufficient to preserve health and capacity to work, can be assured to everybody.”

6) 박세일(1995), ‘하이에크에 있어서 법과 경제’, 하이에크 연구수, p.176~183

7) “The observation of the rule of law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satisfactorily working of a free economy.”

8) Kenneth Arrow(1951), Social Choice and Social Value

성, 파레토 효율성 또는 만장일치, 비독재성(non-dictatorship), 보편성을 포함한다. 사회적 의사결정(선택)을 위해 어느 방식(예: 과반수 투표, 만장일치제, 점수제)을 사용하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위 조건 중 독재(dictatorship)를 허용하면 불가능성 정리가 가능성 정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공동의 목적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그것은 곧 독재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한 하이에크 가설과 어딘지 비슷하지 않은가?

### [민주적 통제의 환상: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권력의 제한이 중요하다]

- 하이에크: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의 구현에 봉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도,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만으로 독재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 자유를 지키려면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권력의 제한이 중요하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이에크는 국가 개입과 계획의 원천적 지양, 그리고 수단적 방법으로는 법의 지배 원칙을 강조한다.
- 다른 가설: 아세모글루는 「좁은 회랑(2019)」에서 하이에크가 두 가지 면에서 실수(mistake)했다고 비판한다. 그 오류의 첫째, 하이에크는 붉은 여왕의 힘이 족쇄 채운 리바이어던을 회랑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 둘째, 소득재분배, 사회 안전망 구축, 갈수록 복잡한 경제에 대한 규제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명백하게 필요함에도 하이에크는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sup>9)</sup>
- 토론: 아세모글루의 하이에크 비판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이에크의 실수인가? 아세모글루의 지나친 낙관인가?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들은 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일까? 아니면 의중에 그들의 기득권 유지·확대와 출세 사다리 기능을 염두에 두고 걸으려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거나 기업활동을 규제하려는 일에 더 열심인가? 시민사회가 정부 권력에 얼마나 독립적인가? 만약 주변의 모든 사물이 붉은 여왕과 함께 권력과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아세모글루의 낙관은 치명적인 오류가 아닌가?

### [한강의 기적과 하이에크 가설에 대해]

- 발제문: “경제계획과 관련하여 ‘한강의 기적’과 같은 ‘성공’ 사례를 들어 계획의 유

9) Daron Acemoglu and James Robinson(The Narrow Corridor, 2019), Chapter 15 Living with the Leviathan, p.464-465): “So Hayek’s mistake was twofold. First, he did not foresee the power of the Red Queen and recognize that it could keep the Shackled Leviathan inside the corridor. Second, perhaps, unsurprisingly, he did not see what is now much more evident—the need for the state to play a role in redistribution, creating a social safety net and regulating the increasingly complex economy that has already emerged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용성을 강조하면서 하이에크의 견해에 반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건 & 토론: 하이에크는 계획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획과 지원은 국가가 해도 가급적 실행은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그런 경우 아닐까? 예를 들어 중화학 공업화 과정을 보면 계획은 정부가 주도해도 실행의 주체는 민간기업이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치 기업가정신(political entrepreneurship)과 민간 기업가정신(market entrepreneurship)의 생산적인 협업(collaboration)이 경제 도약의 기틀 마련에 주효했다는 게 내 사건이다. 정치 기업가정신이 생산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두 부문이 생산적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유례는 매우 드문, 특히 현상이다. 그래서 한국경제 발전은 기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박정희 독재가 계속됐어도 지속 성장했을까? 회의적이다. 변곡점에서 정부가 원하던 일하지 않은 계획 우선의 패러다임이 자율, 개방, 경쟁 원리로 바뀐 것이 필요했다.

### 3.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 흔히 법치(法治)라고 할 때 법의 지배(ROL: 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BL: rule by law)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심지어 RBL은 ROL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하이에크는 이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하이에크에게 ROL은 ‘정부가 모든 행동에서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RBL을 언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법과 입법을 구분해서 말한다. 예를 들어 ‘...**법과 입법의 구분**이 혼란스러워지고, 국가의 모든 행동이 **입법**에 의해 정당하게 권위를 인정받기만 한다면 **법의 지배** 이상은 보존된다는 믿음에 의해... 무제한의 입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0)</sup> 여기서 법은 ROL을, 입법은 RBL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맞는가?) ROL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방점이 있다면, RBL은 국가의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방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보듯이 RBL은 과잉 입법으로 치달으며, ROL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된다. 법치라는 말로 두루뭉술 표현하면 정치인과 공무원은 RBL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ROL과 RBL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 하이에크에게 법의 지배(ROL)는 자유경제의 필수조건이다. 그는 「자유헌정론(1960)」에서 ROL을, 자유경제가 만족스럽게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따라서 경제정책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정부의 정의(the justice of government)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공업이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sup>11)</sup> 스미스가 말한 정부의 정의는 ROL과 비슷한 의미로 해

10) 권혁철 발제문 p.9

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세모글루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포용적 경제제도’의 첫 번째 요인으로 ‘차별 없는 법률 시스템(unbiased system of law)’을 들었는데 이 또한 하이에크가 말하는 ‘법다운 법’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주의 국가는 도덕적이지 않은 반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목적을 지시하는 나치 혹은 집단주의 국가는 도덕적이다.’<sup>12)</sup> 하이에크 인용문 중 도덕적이지 않다는 영어 표현은 amoral? 아니면 immoral? 아마 전자일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도덕경의 천지불인(天地不仁), 성인불인(聖人不仁), 그리고 내가 만들어 혼자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시장불인(市場不仁)을 연상했다. 시장은 비인격적(impersonal)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누구를 편들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인(不仁)하다고 했었다. 하이에크가 법의 지배의 비도덕성을 강조한 말을 법치불인(法治不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거나 눈을 감은 채 판결하니 불인하다. 한국에서 법의 여신상은 인정사정을 살피려는 듯 눈을 뜨고 판결하는 자세이다. 어느 쪽이 ROL이고 공평할까?
- 사족(蛇足): 하이에크의 법의 지배 내용을 읽으며 경제는 무엇으로 성장, 발전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주류 경제학은 노동, 자본, 기술의 3대 생산요소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가르쳐 왔다. 이른바 국민경제 생산함수 모형은 성장 예측·전망과 성과 분석에 널리 쓰이고 있다. 여기에는 하이에크 이론이 스며들 여지가 없다. 내 생각은 이렇다: 경제는 기업, 시장, 법률의 3가지 요소로 성장할 수 있다.

---

11) Adam Smith(1776), “Commerce and manufactures, in short, can seldom flourish in any state in which there is not a certain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stice of government.”

12) 권혁철 발제문 p.7

##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발제: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경제학)

10장과 11장은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에서 도덕과 진실이 추락하게 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담고 있다. 10장은 그 중 도덕의 타락을 다루는데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턴 경의 유명한 말을 epigraph로 삼아 시작한다.

전체주의 사회, 절대 권력의 추구,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아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최고 권력을 잡는 것 사이에 밀접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먼저 10장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 집단주의의 도덕적 영향

이 절에는 “최악의 인간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는 것”은 집단주의의 도덕적 결과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이 담겼다. 흔히 **전체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독일인들이 독일 전체주의의 권력을 잡았던 게 문제였고 품위 있는 영국인들이 전체주의 체제를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영국인들이 많지만 완전한 착각이란 게 하이에크의 이야기다.

현존하는 전체주의 체제들의 최악의 측면들이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전체주의가 조만간 만들어낼 현상이라고 볼 강력한 이유가 있다. 경제활동을 계획하려는 민주적 정치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재 권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경제계획을 포기하든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독재자는 곧 통상적 도덕 가치들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계획에 실패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전체주의로 향하는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김이석, 2024: 263).

사실 왜 독재와 경제계획 포기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지 더 나아가 독재자가 계획의 실패를 면하기 위해 통상적 가치를 무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제스가 촉발했고 하이에크가 참여했던 ‘경제계산 논쟁’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경제계산 논쟁이란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 경제계산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미제스는 사유재산의 소유와 거래가 폐지되어 자본재와 토지 등 사유 재산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합리적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스카 랑게 등 사회주의에 경도됐던 경제학자들이 미제스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의 방법’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시장을 흉내 낸 것이었을 뿐 실제 사회주의 계획에 적용될 수는 없었다.<sup>1)</sup>

원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자고 했던 주장의 핵심은 개인들이 자신만의 선호를 가지고 있을 때 개인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의 결과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계획경제는 개인들의 선호를 반영하기는커녕 개인들은 계획을 실행할 수단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과거 ‘집단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두고 논쟁했지만, 즉, 집단주의가 바라던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도덕적 확신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쟁했지만 하이에크의 질문은 “*사회가 집단주의적으로 조직화되면 어떤 도덕적 견해가 형성되는지, 혹은 어떤 견해가 사회를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지에 대한 것이다.*”(김이석, 2024: 263-4).

### 공통분모를 작게 요구할수록 커지는 동질적 집단의 규모

“*사회주의는 오직 대개의 사회주의자들이 용인하지 않을 방법을 동원할 때에만 실천에 옮겨질 수 있다.*”(265) 그러나 그런 무자비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들은 여전히 다수가 사회 전체의 조직화에 대한 특정한 계획에 동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p. 266) 그러나 다른 이들이 중요한 교훈을 깨우쳤다. “*계획사회에서는 더 이상 국민 다수가 무엇에 동의하는가가 아니라 그 의견에 동의하는 가장 큰 단일 집단이 무엇인가가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결정짓는 관건이라는 교훈*” 그리고 “*의견을 강제할 충분히 큰 집단이 없다면, 그런 강력한 집단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교훈.*”(김이석, 2024: 266).

상당히 균질적인 견해를 가진 무수히 많은 강력한 집단이 최선의 사람이 아니라 최악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 3가지.

(1) 개인의 교육 수준과 지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개인적 견해와 취향이 세분화되고

1) 이와 관련 다음을 참고. 김이석, “시장에 맞섰던 소련의 몰락…계획경제의 종언을 고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3092755521>

특정한 가치체계에 동의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 더 원시적이고 공통된 본능과 취향이 지배하는 낮은 도덕적 수준과 지적 수준으로 내려와야 외관상 통일성과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의 견해를 다른 모든 이에게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집단은 즉 독창성과 독립성이 가장 낮고 자기들의 이상을 사람 수로 밀어붙이는 집단일 것

(2)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만의 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미 만들어진 가치체계를 충분히 자주 틀어주면 이를 쉽게 수용하는 모든 순종적이고 잘 속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3) ‘선동’과 관련된 세 번째 이유/ 사람들이 긍정적 과제보다는 *적에 대한 혐오, 부자들에 대한 질서와 같은 부정적 강령일 때 합의에 이르기 쉽다는 것*/ 유태인 혹은 쿨락과 같은 내부의 적이든 아니면 외부의 적이든, 이 적은 전체주의 지도자의 무기 목록의 필수 아이템이라는 것

### 사회주의 특유의 자기중심적 경향

집단주의 정책은 민족주의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조건적 지지를 얻기 위한 필요성에 더해 본질적으로 집단주의가 보편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하이에크의 주장.

집단주의가 일부 제한된 집단을 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민족주의든 종족주의든 혹은 계급주의든 특정한 형태의 배타주의가 아닌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김이석, 2024: 269).

“만약 영국의 자본재들이 착취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본재로부터 지금 도출되는 소득과 그 사용의 통제에 영국 프롤레타리아에게도 동등한 몫을 가질 자격을 줘야 한다면, 모든 인도인들에게도 그 소득뿐만 아니라 영국 자본재의 비례적 몫을 얻을 자격을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현존하는 자본재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할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는가?”(김이석, 2024: 270).

한 사람이 받아야 할 전반적인 존엄성은 오직 인간이라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그(어떤 집단의) 구성원일 때만 받는다는 것이다. 정말 인간애라는 개념 자체와 국제주의 개념은 완전히 인간에 대한 개인주의적 견해의 산물이다. 집단주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김이석, 2024: 272).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개인의 욕구가 열등감의 발로인 경우가 아주 흔하며, ...개인은 집단 내에서 과격한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과격한 본능을 외부인을 향한 집단행동에서는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

실이…자신의 인격을 집단 속으로 함몰시키도록 하는 이차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김이석, 2024: 272).

한 집단을 대신해 행동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집단 속에 있는 개인으로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많은 도덕적 제약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같다.(김이석, 2024: 273).

유태인과 쿨락에 대한 무자비한 ‘집단적 가해’를 떠올리면 위의 하이에크의 이야기가 잘 전달될 것 같다.

**개인의 책임 대 사회의 책임/** “현대인들 사이에 그들이 자신의 악덕들을 점점 더 큰 집단에다 떠넘겨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윤리적이라고 상상하는 경향이 점증하는 것 같다” (니부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웹 부부와 버나드 쇼의 사례/** “사회주의 계획자들의 민족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 성향은 보통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공통된 현상이지만 웹 부부나 페이비언처럼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김이석, 2024: 273). 역사학자 알레비의 증언에 따르면, “**약소국의 독립은 자유개인주의자들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웹 부부와 버나드 쇼)에게는 이것은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김이석, 2024: 274). 버나드 쇼, “**세상은 필연적으로 강대국 편이다. 약소국들은 강대국에 편입되거나 없어야 한다.**” 하이에크는 도덕적인 양 행세하는 좌파 지식인의 민낯을 이렇게 벗겨내고 있다.

## 권력의 숭배

권력에 대한 숭배는 집단주의자 혹은 전체주의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집단주의자들에게 권력 자체가 유일한 목표인 이유를 하이에크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러 수 있는 전무후무한 막강한 권력을 창출해야 하며, 그들의 성공은 그와 같은 권력을 얼마나 달성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란단다.

많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개인주의 체제에서 사적 개인들로부터 그들의 권력을 박탈하고 이 권력을 사회로 이전시킴으로써 권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비극적 환상에 젖어 이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계획에 봉사하는 데 권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권력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무한정 강화된다. … 중앙계획위원회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은 ‘사적 이사회가 집합적으로 행사하던 권력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완전한 착각이다.(김이석, 2024: 276).

계획당국의 지시에 따른 행동의 통일은 “경쟁의 종식과 계획경제의 창출을 의미한다. … 경쟁체제는 분권화를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체제다.”(김이석, 2024: 277).

경제권력을 지닌 부자들 대신 이들의 부를 박탈해 다른 이들에게 배분해줄 정치권력을 만들자는 흔히 나오는 주장에 대해 하이에크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유한할 뿐인 권력을 전혀 탈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력의 한 수단으로서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면 그 권력은 노예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종속 상태를 창출한다.”(김이석, 2024: 277)고 반박한다.

###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목적

하이에크는 집단주의 체제의 두 가지 특징, 즉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목적체계의 존재의 필요성**,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해 그 집단에게 최대한 권력을 부여하려는 절대적 욕구**에서 특정 도덕체계가 자라나는데, 이것이 기존의 도덕적 원칙과 너무나 판이하고 기존이 도덕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원칙을 찾을 수도 없다고 갈파했다.

형식적 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윤리의 규칙들은 … 최종목적이 좋거나 나쁘지와 상관없이 일반적 유형의 행동을 규정하고 금지한다. 속이거나 흠치는 것, 고문하거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이로부터 어떤 해악이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나쁜 것으로 취급된다.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원칙은 개인주의 윤리에서는 모든 도덕이 부정을 의미한다. ‘전체의 선’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면, 집단주의자에게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 것도 없다(김이석, 2024: 278-9).

오직 자신들이 달성하려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만이 유일한 잣대가 되고 속이거나 흠치는 것,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 등 기존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은 ‘개에게 쥐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의 공통된 최우선의 목적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반적 도덕 혹은 규칙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전시에 이를 경험한다. 그러나 심지어 전쟁과 최대의 재앙에 처해서도 이 나라 영국에서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다른 가치들 가운데 일부만 유보하는 정도에 그친 채 매우 온건한 전체주의로 접근했을 뿐이다. 몇 가지 소수의 구체적 목적들이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곳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잔혹행위가 의무가 될 수도 있고, 인질의 총살형이나 노인이나 병자의 살해와 같은

우리의 모든 감정에 반하는 행동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로 취급되기도 하며, 수십만 명의 강제추방과 강제수용이 희생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승인한 정책실행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인종개량을 위한 여자의 강제징집”과 같은 제안들이 심각하게 고려된다.(김이석, 2024: 283-4).

전체주의 국가의 운영에 유력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선, …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런 야비한 행위가 필요하다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떠한 도덕적 규칙이라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최고결정자의 도구인)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을 지닌 지위라 해도 도덕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길 매력은 거의 없다. …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취향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취향, 다른 이들을 복종시키는 데 따른 즐거움, 잘 작동하는 막강한 전체주의 기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서 얻는 즐거움 그것뿐이다. (김이석, 2024: 284-5).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 선한 사람들이 전체주의 기구의 지도적 지위를 열망할 이유는 별로 없지만, …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들은 전체주의 기구에서 특별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 **왜 노예의 길 10장에 주목하게 되는가**

우리가 노예의 길, 10장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관찰되는 상황 때문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저히 국회의원감이라고 보기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인물들이 등판하여 당의 지지를 업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노예의 길, 이 장이 다룬 내용은 비록 다른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혹은 그 당의 대표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정당이라면 당연히 존중해야 할 많은 가치들 혹은 목적들을 압도하는 당장 달성해야 할 어떤 목적 혹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의 달성을 위해 기존의 도덕관념 같은 것들은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충성스럽게 이를 실천할 인물, 기존의 도덕에서 볼 때 최악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공천해서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11장 진리의 종말

발제: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경제학)

11장은 ‘진리의 종말’이라는 매우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제목으로 가장 극적으로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사상의 국유화가 어느 곳에서나 산업의 국유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아 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카(E. H. Carr)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선전의 역할

“*사회계획이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체계에 모든 사람이 봉사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이 이 목적체계를 신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동일한 목적들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이 목적들을 자신의 목적들로 삼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김이석, 2024: 289). 선전을 통해 그런 ‘신(新) 사회주의 인간’(New Socialist Man)을 창출하려고 한다.

이런 새로운 인간의 창출은 개별 인간으로부터 주체성과 독립성을 박탈하고 이들을 전체의 목적에 혹은 전체의 목적을 빙자한 통치자의 목적에 봉사하는 영혼이 빠진 로봇으로 만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전체주의 사회에서 동원된 선전은 여타 사회에서와는 다르다. 이를 하이에크는 이렇게 설명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선전의 속성과 효과가 그렇게 철저하게 변하는 까닭은 모든 선전이 동일한 목표 아래 같은 방향으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이 선전들이 모든 개인들의 정신에 아주 특별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현재 유통되는 모든 정보의 출처들이 하나의 통제 아래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것 혹은 저것을 설득하는 차원과는 다르게 된다. 숙달된 선동가는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개인들의 심성을 키울 힘을 가지게 되며, 가장 지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도 오랫동안 다른 출처들로부터 격리되면 그런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김이석, 2024: 290).

전체주의 선전의 도덕적 결과는 아무튼 더 심오한 종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모든 도덕의 기초 가운데 하나인 진리에 대한 감각과 존중심을 침식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모든 도덕규범을 파괴한다. 임무의 특성상 **전체주의 선전은 가치의 문제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진위(眞僞)의 문제로 확장되지 않을 수 없다.** (김이석, 2024: 291-2).

진위의 문제로 확장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식적 가치들을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가치들이 정당화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미 가진 가치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보통 어떤 **수단과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실이라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이석, 2024: 292).

### 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강요

전체주의 사회에서 ‘진실’에 대해 강요하게 되는 배경을 하이에크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것을 장점으로 보고 어떤 것을 단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무런 확정적인 도덕적 규칙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당국은 당시 장단점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끊임없이 쟁점들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계획당국은 그 결정들을 **사람들에게 정당화해야 하거나, 적어도 어떻게든 그 결정들이 옳았다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김이석, 2024: 293).

계획당국(최고결정자)의 무오류성을 믿도록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만, 모택동의 식량증산을 위한 참새 소탕 명령처럼 실패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비판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는 단순히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자리를 주지 않았던 사회질서 속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보이는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는 것과 젊은 시절에 읽은 소설에 등장하는 ‘귀족적인’ 큰 키의 금발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의 동료들과 공유하는 편견을 정당화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들을 기꺼이 끌어안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비이론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이의 행위를 지도할 공식적 신조의 일부가 된다. …산업문명에 대한 광범하게 퍼진 혐오와 전원생활에 대한 낭만적 향수가 시골사람들의 병사로서의 특별한 자질에 대한 믿음과 보태져 ‘피와 흙’이라는 또 다른 신화의 근거가 되게 한다. 즉, 피와 흙, 이 두 가지가 궁극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에 대한 모든 신념의 상징—일단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할 일을 결정짓는 이상으로 일단 수용되면, 의문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의 상징—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노력을 지시하고 집중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런 공식적 원칙들의 필요성은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가들에 의해 예견되었다. 플라톤의 ‘고귀한 거짓말’(noble lies), 그리고 소렐(George Sorel)의 ‘신화들’은 나치의 인종주의 혹은 무솔리니의 협동조합국가의 이론이 가진 것과 동일한 목적에 봉사한다.(김이석, 2024: 294-5).

### 옛 가치의 이름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신(神)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 쓰는 가장 효과적인 수법은 “*예전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언어의 철저한 곡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심하게 홍역을 치른 것은 물론 ‘자유’라는 단어이다. 자유는 다른 어느 곳에서 만큼이나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자유롭게 쓰이는 단어이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본래 의미의 자유가 파괴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자유의 파괴는 항상 사람들에게 약속된 새로운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우리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자유의 의미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경종으로 삼아 우리에게 *‘과거의 자유 대신 새로운 자유(New Liberties for Old)*를 약속하며 유혹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김이석, 2024: 296).

그런 사례로 하이에크는 칼 만하임의 ‘집단적 자유’(collective freedom)를 들면서 그것이 ‘옛 가치의 이름으로 도입된 옛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임을 갈파한다.

만하임 박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집단적 자유(collective freedom)’는 사회구성원의 자유가 아니라, 전체주의 정치가가 말하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을 사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계획자의 무제한적 자유이다(김이석, 2024: 297).

### 통제받지 않는 학문 분야의 실종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사회에서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학과 같은 학문까지도 통제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을 지지하게 하려면, 그들 스스로 지향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선택된 수단도 올바른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

따라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공개적 비판이나 의심의 표시는 공공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압되어야 한다(김이석, 2024: 299).

하이에크는 웹 부부의 러시아 기업에 관한 보고를 그런 현상의 사례로 제시한다.

“작업이 진행중인 동안 그 계획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공개적 의심의 표시나 우려까지도 불충의 행동이며, 심지어 배신의 행동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머지 간부진의 의지와 열정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이석, 2024: 299).

특정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사회계획 전반의 성공에 관한 의심은 더욱 용서받지 못할 파괴행위로까지 취급된다.

지식을 전파하는 모든 기관, 학교, 언론, 무선, 영화 등은 배타적으로, 진실이건 오류이건, 당국에 의해 취해진 결정의 올바름에 대한 믿음을 확산시킬 것이다. 의심이나 주저를 불러일으킬 모든 정보는 … 차단될 것이다. 그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심에 대해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가 특정한 정보가 출판될지 혹은 차단될지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곳에서는 전시(戰時)에만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일어나겠지만,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영구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부의 예지에 대해 의심이나 불만을 야기할 지 모를 그 어떤 것도 사람들로 부터 감춰질 것이다. 다른 곳에서의 조건보다 나쁘다는 비교의 근거, 실제로 택한 길과 다른 대안에 대한 지식, 정부 측의 약속이행 실패 혹은 삶의 조건을 개선할 기회의 상실을 암시하는 정보는 모두 차단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체계적 통제가 행해지지 않거나 견해의 통일이 강제되지 않는 분야는 사라질 것이다(김이석, 2024: 300).

의견의 전체주의적 통제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수학 같은 학문으로까지 확장된다.

상대성 원리가 ‘물리학의 기독교적이고 게르만적인 기초’에 대해 ‘유태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든, 혹은 이것이 ‘맑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충돌되기’ 때문에 반대하든, … 추상적 사고를 혐오하는 유형을 보인다. 수리통계학의 어떤 공리들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계급투쟁의 일부를 형성하고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인 수학의 역사적 역할이 낳은 하나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든, 아니면 주제 전체가 “인민들의 이익에 봉사하리라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순수수학이라 해도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연속성(continuity)의 속성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지닌 것조차도 ‘부르주아 편견’으로 치부될 수 있었다(김이석, 2024: 301-2).

그런 상황을 짐작케 하는 사례들로는 <맑스-레닌주의 자연과학지>(The Journal for Marxist-Leninist Natural Sciences) 슬로건을 든다: “우리는 수학을 통해 당을 대변한다. 우리는 외과(surgery)에서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순수성을 대변한다.”

독일의 수학자들의 단체명은 <민족사회주의 수학자 연합지>(Journal of the

*National-Socialist Association of Mathematicians*)이고 노벨상 수상 독일 물리학자 레나르트(Lennard)의 필생의 업적을 정리한 책의 제목이 《4권으로 된 게르만 물리학》(German Physics in Four Volumes)이다.

## 진리와 사상의 자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신조(信條)를 강요하려는” 유혹은 지식인이 한 번쯤 느꼈겠지만, 하이에크는 그런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새로운 다음 주장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는 없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의견이나 선호는 정치선전, 광고, 상류계층에 대한 모방에 의해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판에 박힌 관례에 따라 생각하게끔 강요하는 여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김이석, 2024: 306).

이 지식인들이 이로부터 내리는 결론은:

만약 대다수의 이상과 선호가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해 형성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통제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김이석, 2024: 306).

그러나

*지적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독립적 사고가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자유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왜 지적 자유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지적 자유가 지적 진보의 핵심적 동인으로 작동하는 본질은 모든 이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거나 혹은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은 그 어떤 (비판적) 명분이나 사상이라도 그 누군가에 의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반대가 억압되지 않는 한, 동시대인들을 지배하는 사상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사상을 기존의 주장과 선전을 검증하는 데에다 집어넣는 그 누군가가 항상 나타날 것이다.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양한 개인들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바로 사상(思想)의 생명을 구성하는 전부이다. 이성의 성장은 그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사회적 과정이다.

이성의 성장은 그 구체적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떤 견해들이 이성의 성장을 돕게 될지, 어떤 견해가 그렇지 않을지 미리 알 수 없다. 한 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닌 그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도 이성의 성장과정

을 지배하고자 하면, 그만큼 이성의 성장은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성장의 본질적 성격이다. ...

정신의 성장을 통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그 성장을 제한할 뿐이며, 조만간 생각의 정체와 이성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김이석, 2024: 306-7).

사상과 이성의 발전과 관련해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교리가 의미하는 바를 하이에크는 이렇게 정리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만이 우리가 이성의 성장을 이끄는 초(超)개인적 힘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반면, 집단주의 교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정신이 숭고하게 지배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귀착한다. 이 사실은 정말 모든 집단주의 교리와 이 교리의 '의식적' 통제 혹은 '의식적' 계획에 대한 요구가 내포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이러한 사회적 과정 앞에서 겸손해 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 관용하는 태도이며, 사회과정에 대한 포괄적 지시를 요구하는 마음가짐의 근저에 놓여 있는 지적 오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이다.

### **우리 사회엔 왜 금방 가짜로 드러날 선동까지 난무하는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11장 진리의 종말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사회에 왜 광우병 선동,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또 최근에는 계엄 괴담에 이르기까지 각종 선동이 난무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사람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너무 박약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의 수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광우병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난 후 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 제 10장, 제 11장에 대한 토론문

### - 전체주의의 완성을 위한 권력과 지식의 장악 -

토론: 이현종 (핵의학 전문의, 의학박사)

《노예의 길》 10장과 11장은 전체주의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음을, 더 나아가 진리 또한 사회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 1. 전체주의 사회의 속성

전체주의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의 목적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사회이다. 사회의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는 독재자 개인일 수도 있고 그를 추종하는 집단일 수도 있으며 넓은 범위에서는 특정 이익집단일 수도 있다. 그 내용 또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선의부터 독재자의 배만 불리겠다는 악의까지 다양할 수 있다. 주체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 목적’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상이한 가치척도를 무시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될 위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이들”의 영도 하에 사회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 2. 전체주의 사회를 위한 전략

상이한 가치척도를 지닌 개인들이 모두 사회의 목적을 최상위의 가치로 여기게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치척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외부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즉,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목적을 최상위에 두게끔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주의에서 권력의 장악이 매우 중요하고 그 권력은 부도덕적일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그래야만 함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척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다. 즉, 정보와 지식을 통제하여 사회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선동, 학문 자유의 억압, 전문성의 파괴가 필수적임을 뜻한다.

#### 3. 권력의 장악

사회적 목적을 최상위에 두게끔 강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개인에 대한 존중은 포기해

야 한다. 이는 부도덕한 사람이 전체주의의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더 나아가 철저하게 부도덕한 사람이야 전체주의 사회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음을 말한다.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인의 가치척도를 강제로 조작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동체가 스스로 설정한 목적 혹은 그의 상관이 그에게 달성하도록 지시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가 범하지 못하도록 그의 양심이 막을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누가 전체주의의 권력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주의 권력의 본디 속성에 의한 것이다. 만약 전체주의의 권력자가 일말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면, 즉 타인의 가치척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허용한다면 이는 그가 원하는 전체주의 사회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가 할 일은 오로지 “더 원시적이고 공통된 본능과 취향이 지배하는 낮은 도덕적 수준과 지적 수준”의 욕구와 감성에 호소하며 개인의 가치척도를 탄압하는 것뿐이다.

#### 4. 최악의 인물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리고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이미 닳고 닳아버린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들이 개인을 존중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보다 먼저 달성해야 할 특정 목적 혹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목적’이라는 말로 포장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수호 혹은 이념을 달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목적이 그러한 전체주의적 시각에 경도되어 있을수록 최악의 인물이 정치권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인물이어야만 그 정당이 원하는 바를 이를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권력자는 사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름의 합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 5. 지식의 장악

지식은 좁게 보자면 학술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나 넓게 보자면 정보 자체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학문, 정보, 지식은 모두 같은 범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의 생산은 그 자체로 자유의 상징과도 같다.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결합될 때에 지식이 생산된다. 한편 거짓된 지식 혹은 일방의 주장만을 담고 있는 정보는 선동에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참된 지식 혹은 균형 있는 정보의 광범위한 확산은 사회의 목적에 모든 개인이 협조하는 데에 큰 장애를 초래한다. 따라서 전체주의에서는 지식의 생산 자체를 통제해야 하고 전체주의 사회의 목적에 방해되는 정보의 생산은 막고 거짓된 혹은 유리한 정보만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계획당국은 그 결정들을 사람들에게 정당화”할 수 있고 “그 결정들이 옳았다고 믿도록” 만들 수 있다.

#### 6. 전문성의 파괴

“맑스-레닌주의 자연과학”, “민족사회주의 수학”, “게르만 물리학”이라는 용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주의에서는 사회과학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서 추상적 학문 또한 제한한다. 아마 이러한 지식들도 결국은 전체주의의 오류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장악과 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성을 파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구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혹은 지식을 다루므로 그들을 장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생산 및 의사 결정에는 전문가의 의견 대신 특정 이익집단 혹은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민중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국가 권력이 전문가의 판단에 직접 개입하여 옳고 그름을 재단해야 한다. 의료 행위에 있어 검사, 투약, 수술 및 시술의 적절성을 국가 보험이 결정하고 그 옳고 그름을 사법부가 판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시이다.

## 7. 선동

선동이 판치는 이유 중 핵심은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이들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특정 정보 내지는 나아가 거짓 정보의 확산을 원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개인들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나, 이는 장기간의 설득과 교육을 요하는 부분이겠다. 결국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에 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즉 사회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제 15장. 국제 질서의 전망 (발제문-1)

### 미국과 EU: 같은 연방제, 다른 경제적 결과 -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본 분석 -

발제자: 이강영

#### 서론

미국과 EU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운영하지만, 두 체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각 주는 교육, 세제, 법률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sup>1) 2)</sup> 그러나 동시에 통화 정책, 무역, 환경 규제 등 중요한 경제 분야에서는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 정부의 자율성은 매우 크지만, 완전한 경제적 자율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입니다.<sup>3)</sup>

반면, EU는 초국가적 연합체로서 각 회원국이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EU 차원의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통화정책에서 독립성을 상실했고,<sup>4)</sup> 경제 정책 전반에서도 EU의 규제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다른 정책에서는 여전히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연방 체제의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하이에크의 연방제 원리에서 보면 자율성과 중앙 통제의 균형이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1) Tax Reform Moves to the States: State Revenue Implications and Reform Opportunities Following Federal Tax Reform 연방 세제 개혁 이후 주 수입에 대한 영향과 개혁 기회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state/state-conformity-federal-tax-reform/>

2) Federalism - Education <https://federalism.org/encyclopedia/no-topic/education/>

3) The Court interpreted Article I to give Congress the power to regulate wholly intrastate economic activity that substantially affects interstate commerce. 법원은 헌법 제1조를 해석하여, 의회가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 간 상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https://constitutioncenter.org/the-constitution/articles/article-i/section/8712>

4) Monetary policy inflexibility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and\\_Monetary\\_Union\\_of\\_the\\_European\\_Union](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and_Monetary_Union_of_the_European_Union)

2023년 기준, 미국의 GDP는 EU의 1.5~2배에 달하며, 두 연방 체제는 경제적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미국과 EU의 경제 규모는 비슷했으나, 현재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sup>5)</sup> 이번 발제에서는 하이에크의 연방제 철학을 바탕으로, 왜 두 연방 체제가 상반된 경제적 결과를 보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학습 효과, 자율성,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제가 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하이에크의 연방주의 철학에 따르면, 자율성과 중앙 통제 사이의 균형이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비교하여, 자율성이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 1. 연방제에서 자율성의 역할: 미국과 EU의 차이점

하이에크는 연방제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의 연방제적 접근에서 중요한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 미국: 미국 연방제는 주별 자율성을 강조하여 각 주가 독립적으로 경제 정책, 세제, 노동 규제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각 주가 독자적인 학습과 실험을 통해 최적의 경제 모델을 찾을 수 있게 하며, 연방 내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정책 실험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연방 내 자치 단위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각자의 경제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채택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텍사스는 비교적 낮은 세율과 적은 규제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반면, 캘리포니아는 기술 중심의 경제를 강화하며 높은 혁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EU: 반면, EU는 중앙집권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유로존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특히 통화정책은 물론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잃었고, EU의 다양한 규제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sup>6)</sup> 이는 각 국가가 자신의 경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며, 정책적 실험과 학습의 기회도 제한됩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창의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특

---

5) US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GDP Comparison 2023  
<https://worldstatistics.net/us-states-and-european-countries-gdp-comparison-2023/>

6) ... as only countries that comply with the EU fiscal framework are eligible for asset purchases by the Eurosystem EU 재정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국가만이 유로시스템의 자산 매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https://www.abnamro.com/research/en/our-research/euro-rates-strategist-the-implications-of-the-new-eu-fiscal-rules>

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며, 그리스와 같은 국가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제 아래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던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sup>7)</sup>

## 2. 지방자치를 통한 학습과 경제적 성과

하이에크는 지방자치가 개인과 공동체에게 책임감을 배우고, 정책 실험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율적인 정책 실험이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특히 미국의 연방제에서 각 주가 독립적으로 경제적 정책을 실험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 미국의 지방자치와 경제적 성과: 미국은 연방주의 구조에서 각 주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주별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는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뉴욕은 강력한 환경 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실험은 연방 전체의 경제적 다양성을 강화하며, 각 주가 독립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하이에크는 이와 같은 자율적 정책 실험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주는 서로 다른 정책을 통해 성과를 비교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더 나은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EU의 중앙집권적 한계: 이탈리아의 사례

반면, EU는 중앙집권적 구조가 강하며,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 및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높은 공공 부채와 경기 침체에 직면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독립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탈리아는 높은 공공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중앙 통제 하에서 자율적 정책 실험이 제한될 때, 경제적 성과가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이에크는 중앙 통제가 각 국가가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실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sup>8)</sup> 이탈리아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독자적인 경제 회복 전략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sup>9)</sup>

7)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investing/070115/understanding-downfall-greeces-economy.asp>

8) The conflict between planning and freedom cannot but become more serious as the similarity of standards and values among those submitted to a unitary plan diminishes. 자유와 계획 간 충돌은 단일한 계획 아래 놓인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의 유사성이 감소됨에 따라 더 심각해진다. (p. 295).

9) Instead, simultaneous austerity caused a drag on all countries. 대신, 동시적인 긴축 정책은 모든 국가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 3.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 자유 시장 vs. 계획 경제

하이에크는 자유 시장이 개인의 창의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EU의 시장 접근 방식에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미국은 자유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과 개인이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을 주도합니다. 주별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으며, 이는 혁신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밸리는 규제보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번영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주별로 세제와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자본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적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 EU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채택하여 비교적 중앙집권적 통제와 규제가 강합니다. EU 회원국들은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제도를 중시하여 기업 활동이 중앙 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창의성과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행사할 수 없어 경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EU는 중앙의 통제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제적 유연성과 성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에크의 이론에서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합니다.

### 결론

미국과 EU는 모두 연방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보면 자율성과 중앙 통제의 차이가 이 두 연방 체제의 경제적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지방자치와 정책적 실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반면, EU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규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한받고, 경제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sup>10)</sup> 하이에크

<https://www.bruegel.org/blog-post/austerity-tales-netherlands-and-italy>

10) The eurozone crisis has exposed the weakness of this policy theory. No happy equilibrium has been forthcoming. 유로존 위기는 이 정책 이론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만족스러운 균형 상태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intereconomics.eu/contents/year/2012/number/4/article/the-welfare-state>

는 자율성과 시장 경쟁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으며, 이는 미국의 연방제가 성공적으로 이를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두 연방체제의 경제적 결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고려해 봐야 할 다른 요인들:

- 역사적 배경: 미국은 200년 이상의 단일 국가 역사를 가진 반면, EU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연합체입니다.

- 인구 구조: 미국은 젊고 다양한 인구 구조를, EU는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술 혁신: 미국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본거지로, 이는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지정학적 요인: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의 이점을, EU는 다국적 연합체로서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 제 15장. 국제 질서의 전망 (발제문-2)

## 하이에크의 연방제와 유튜브 - 디지털 시대 자율성과 지방자치 -

발제자: 이강영

### 서론

올해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저서 노예의 길이 출간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확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전 세계 자유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에서는 국가 간 협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질서 유지라는 연방주의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 특히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자율성과 지방자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발제문에서는 하이에크가 주장한 연방제의 원리를 유튜브의 자율적 운영 구조와 연결 지어 분석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자율성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1. 연방제와 유튜브의 자율성 구조

하이에크는 연방제를 통해 국가 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앙 권력이 최소한의 법적 규제만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튜브는 각 채널이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sup>1)</sup> 규칙을 통해 플랫폼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검열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제에서 국가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인 법적 규제는 따르는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

1)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https://www.youtube.com/howyoutubeworks/policies/community-guidelines>

연방제의 특징으로는 중앙 정부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유튜브에서도 창작자들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적인 콘텐츠나 유해한 정보를 걸러내어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는 연방제에서 중앙 권력이 일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자율적 구조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하이에크가 연방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법적 질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것과 일치합니다.

## 2. 중앙집권적 미디어와 유튜브의 차이점

하이에크는 중앙집권적 통제와 계획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연방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미디어인 방송국은 중앙에서 모든 콘텐츠를 관리하고 송출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sup>2)</sup> 방송국은 특정한 의제나 방식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하며, 개별적인 창의성이나 자율성보다는 중앙기관의 통제하에 운영됩니다.

반면에, 유튜브는 개별 창작자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제작하고,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각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은 하이에크가 강조한 개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창의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유튜브의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각 창작자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생산됩니다. 단,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특정 유형의 콘텐츠가 더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적 방송국은 통일된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창작의 자율성이 제한된 반면, 유튜브는 개인 창작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의견과 창의성을 존중합니다.<sup>3)</sup> 이러한 차이는 하이에크가 중앙집권적 통제를 경계하고, 개인의

2) <https://en.wikipedia.org/wiki/Centralcasting>

3) Diversity on YouTube: Building a Welcoming Community YouTube에서의 다양성: 환영하는 커뮤니티 구축

<https://johnnyholland.org/2024/01/diversity-on-youtube-building-a-welcoming-community/#r>

자율성을 강조했던 연방제의 원리와의 일맥상통합니다.

### 3.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하이에크의 주장

하이에크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자율적 정치 구조가 자유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역적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각 지역 사회가 정치적 책임을 학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통제보다 개인과 지역 사회의 자율적 판단이 민주주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치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채널은 일종의 자율적 공동체로, 자신의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시청자와 상호작용하며 가상의 자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채널은 해당 관심 커뮤니티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며 발전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자치'는 실제 지방자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널들은 플랫폼의 규칙과 알고리즘에 크게 영향받으며, 실질적인 행정적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유튜브 커뮤니티는 지리적 공동체가 아닌 관심사 기반의 가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정치적 책임감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유튜브의 구조는 일부 자치적 특성을 보이지만, 이를 하이에크의 지방자치 이론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자치와 책임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자율성과 민주적 참여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4. 디지털 시대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

디지털 시대에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그 자리를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영국의 18-24세 인구 중 41%가 소셜 미디어를 주요 뉴스 출처로 사용하며, 이는 전통적인 방송국의 시청률 감소와 맞물려 있습니다.<sup>4)</sup> 젊은 세대는 전통 미디어 대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 자율적 콘텐츠 소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4)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digital-news-report/2023/dnr-executive-summary>

하이에크가 경고했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는 점차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 소비 패턴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sup>5)</sup>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개별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며, 이는 하이에크가 강조한 자유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현대 사회에서 실현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5. 법의 지배와 자율성의 균형

하이에크는 연방제 하에서 법의 지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법적 규제가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각 채널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요소로, 플랫폼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이에크는 법적 규제가 지나치면 자율성이 억압되지만, 규제가 없다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플랫폼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는 연방제의 \*\*하이에크는 연방제의 원리를 통해 자율성과 법적 규제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이는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 특히 유튜브의 자율적 구조에서 그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각 창작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법적 규제도 존재하여 질서와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하이에크가 강조한 법의 지배 원리와의 연결됩니다.

유튜브는 콘텐츠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규제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가 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율성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주며, 하이에크가 연방제에서 주장한 자율적 자유와 법적 규제의 이상을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5) By curating content tailored to individual preferences, publishers can forge a direct and intimate connection with their audience, laying the foundation for sustained engagement and brand loyalty. 개인의 선호에 맞춘 콘텐츠를 큐레이션함으로써, 출판사는 독자와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참여와 브랜드 충성도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quintype.com/business/gen-z-news-consumption>

하이에크의 연방주의 원리는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과 매우 흡사합니다. 유튜브는 각 창작자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자율성과 규제가 어떻게 충돌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이에크가 강조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유튜브에서 각 채널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제적 접근은 디지털 시대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대 사회에서 법의 지배와 자율성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일깨어준다.

## 제 15장 제 1발제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신동준

하이에크가 연방제를 제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전체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방제의 장점으로 다음을 기대했습니다:

1. 규제 완화
2. 통화 정책의 국가독점 탈피
3. 조세 제도의 다양화
4. 사회보장제도의 유연화
5. 교육 정책의 다양화
6. 법 제정의 분권과 경쟁

하이에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정책 개발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쟁에 대한 독특한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경쟁이 새로운 지식 창출과 습득을 촉진하며, 그 지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하이에크의 연방제 구상에서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통의 법과 규칙, 즉 법치(Rule of Law)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하이에크는 그의 저작에서 법치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의 법치 개념은 단순히 법 준수를 넘어, 정부 행위가 미리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 규칙도 도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와 풀러는 법치의 8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1. 법의 일반성: 법은 규칙성이 있어야 하며, 특수이익을 위해 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2. 법의 공개성: 법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 소급입법 금지: 과거의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법의 명확성: 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5. 모순 없는 입법: 법체계 내에서 법들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6. 실현 가능한 법: 법은 준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7. 안정성: 법은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8. 법과 법집행의 일치: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EU의 연방제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제는 각 주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며, 연방법은 모든 주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하이에크가 주장한 법의 일반성과 평등한 적용 원칙에 부합합니다. 반면 EU의 경우, 일부 규제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법의 일반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제는 각 주가 다양한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하이에크가 강조한 경쟁을 통한 지식 창출과 학습의 과정을 촉진합니다. 반면 EU의 중앙집권적 접근은 이러한 정책 실험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와 법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법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연방제 시스템은 개인과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이에크의 이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의 규제 중심 접근은 이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시도가 하이에크의 국제적 연방제 비전과 일치하는 면도 있습니다. EU는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공통의 법 체계를 만들어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에크가 주장한 국제적 연방제의 이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에크의 법치 개념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연방제 시스템이 EU의 시스템보다 하이에크의 이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시도 역시 하이에크의 국제적 연방제 비전과 일치하는 면이 있으며, 이는 더 넓은 경제 영역을 창출하고 국가 간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방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
2. 법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정책 실험을 허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3. 국제적 연방제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4.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안전망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일까?
5. 연방제 하에서 통화 정책의 국가독점 탈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이에크의 통찰력 있는 견해를 참고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연방제의 미래는 자유의 확대와 법치(Rule of Law)의 적용, 경쟁의 효율적인 도입에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노예의 길》 15장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해드리며 토론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소국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계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승자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Fuller, L. L.(1964). The Morality of Law. Yale University Press.  
Hayek, F. A.(1944). The Road to Serf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ume 1: Rules and Or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민경국(2007).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 (2016).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북코리아

## 제 15장 제2발제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신동준

### 1. 연방제와 유튜브의 자율성 구조 비교

하이에크는 연방제를 통해 중앙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유튜브의 구조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 유튜브는 사기업이며, 그 규칙은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됩니다. 하이에크가 주장한 연방제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중앙집중적이며, 이는 하이에크가 경계한 '계획 경제'의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하이에크는 중앙집권적 계획의 한계와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 유튜브 사용자들은 실제 시민들과 달리 플랫폼을 쉽게 떠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이에크가 말한 자치는 더 깊은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하이에크의 연방제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정부 수준 간의 권력 분산과 견제입니다. 유튜브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권력 분산 메커니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알고리즘과 정책 결정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2. 중앙집권적 미디어와 유튜브의 차이점

하이에크는 중앙집권적 통제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유튜브가 기존의 미디어보다 덜 중앙집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 통제 메커니즘(알고리즘, 콘텐츠 정책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에크가 우려한 '지식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분산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분산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콘텐츠의 노출과 유통을 결정하는 구조는 하이에크가 경계한 '계획 경제'의 변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3. 지방자치의 중요성

하이에크의 지방자치 개념을 유튜브 채널에 적용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어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실제 정치적, 경제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플랫폼의 규칙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이에크가 말한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을 전제로 합니다.

또,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플랫폼의 정책 변경에 대해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는 하이에크가 강조한 개인의 자유와 자치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치는 규칙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4. 디지털 시대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

이 부분은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개념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진정한 의미의 자생적 질서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나타내는지는 더 살펴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개념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질서를 의미하고, 유튜브에서의 콘텐츠 생산과 소비 패턴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자생적 질서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개입과 플랫폼의 정책이 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사용자의 주목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는 하이에크가 주장한 자유로운 시장 질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 5. 법의 지배와 자율성의 균형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중요시했지만,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법의 지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민주적 과정 없이 만들어지고 변경될 수 있는 사기업의 규칙입니다. 하이에크가 강조한 법의 일반성과 예측가능성이 유튜브의 정책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플랫폼의 규칙은 종종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에크가 주장한 법의 지배 원칙과 상충됩니다. 법의 지배는 모든 이에게 평등

하게 적용되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전제로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규칙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발제문2는 하이에크의 이론을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려는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하이에크의 핵심 개념들(개인의 자유, 법의 지배, 중앙집권화의 위험 등)을 디지털 플랫폼의 맥락에서 더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가진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과 통제 메커니즘에 대해 하이에크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분명 전통적인 중앙집중적 미디어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곧 하이에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자유 시장과 자생적 질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화와 통제가 등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이론을 현대 디지털 환경에 적용할 때는 이러한 새로운 권력 구조와 통제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자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합니다.

## 참고문헌

<https://academic.oup.com/book/45655/chapter/398022156>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6457818\\_Hayek\\_and\\_the\\_crypto\\_currency\\_revolution](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46457818_Hayek_and_the_crypto_currency_revolution)

<https://academic.oup.com/book/4034/chapter/145687812>

<https://www.youtube.com/watch?v=x725LqIVwss>

<https://www.diplomacy.edu/blog/the-vienna-nexus-five-thinkers-who-coded-the-operating-system-of-modernity/>

<https://www.thefederalist.eu/site/index.php/en/notes/2193-federalist-thought-in-friedrich-von-hayek>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data-and-policy/article/algorithmic-attention-rents-a-theory-of-digital-platform-market-power/D85FE41F6CF99FC57DDFB2B2B63491C5>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american-political-science-review/article/what-is-spontaneous-order/859919D45A35BB567A7338B0EA4ECAD0>

## Epilogue

등잔 밑이 더 어둡고 서울 타워 안 가본 서울 사람 가득하더라. 하이에키안이라 자처하되 《노예의 길》 내용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무원 객관식 시험 치르듯 노예의 길 책 전체에 대한 100문의 객관식 시험으로 《노예의 길》 해득 지수를 만들어 보면 나올까. 우리의 지적 공동체의 면허증 같은. 8장의 타이틀이 왜 ‘누가, 누구를?’로 되어 있고 그 뜻은 무언가. 13장(우리 속의 전체주의자)을 10분 안에 요약 발표하시오. 한국 좌파 정권 시절, 곡학아세로 소득주도성장이란 신화를 급조해 보급에 앞장선 좌파 학자들을 하이에크 13장 식으로 적시하시오. 하이에크는 9장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포괄적 사회보험을 다(both) 요구한 것인가, 그중 하나 이상(or)을 요구한 것인가...

우리가 그를 여전히 모르는 이유는 진지함 부족이 첫째 이유이겠지만, 둘째 이유는 그만큼 그의 깊이가 깊기 때문일 것이다. 황인학박사님의 토론문에 나온 하이에크의 논문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1945)는 지난 100년간 AER에 게재된 최고의 논문 20개 안에 선정되었다. 우리는 그런 그와 일부 시간을 함께 살았다. 죽은 스승을 왜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

F 성적을 면하고자 연구실에서 억지 변명 겸 호소를 하던 학생이 포기하고 문을 닫기 전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1, 2초 간 눈을 바라보다 문을 닫고 떠났다: “저의 성(姓)도 하이에크처럼 ‘하’씨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제법 혼란을 주었음을 그 학생은 아직도 모를 것이다. KTX 이전 시절, 열차가 가끔 라디오 뉴스를 들려주었는데 하이에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서울역에 내려 수강생 대표에게 오늘 수업에서 언급한 바로 그 하이에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공중전화로 알리자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 단호하게 답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수업은 휴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었건만.

출간 후 80년이 흐른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자백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고 아직도 무지하다는 자괴심이다. 간신히 오른 정상에서 만난 하이에크에게 ‘우리 어땠어요?’라고 묻자 이렇게 답한다: ‘내려가라, 다시 올라 와라’. 우리도 나이 들어 가는 바람에 언제 다시 여기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식 낳기에 소홀했던 이 나라 사람들 버릇대로 제자도 제대로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 돌발 산행조차 간신히 오른 것인데.

2024. 09. 27(금)

무모한 열정만으로 이 세미나를 치른 “‘노예의 길’의 노예들” 일동